

교육현장 이념투쟁 추방해야 한다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1. 사상누각의 변화무상한 교육정책들

올해도 가을에 접어들자 노벨상 수상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놀라움과 탄식이 교차되고 있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국의 고유전통의약에 관한 연구의 결실로 박사학위도 갖지 아니한 85세의 노연구자가 노벨상을 받는가 하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속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음으로써 일본은 21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번 가을 중국과 일본은 조용한 축제를 즐기고 있다.

때맞춰서 우리 언론과 학계는 과연 그러한 놀라운 결실을 가져온 저들의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점을 화두로 한 참 시끌벅적하더니 결국 그것은 국가 차원의 기초교육과 기초연구에 대한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교육정책의 실천과 장기적 투자에서 연유한다는 원론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원론적이지만 그대로 진실이다.

건국 70년, 우리는 지난 세기까지는 빈곤에서의 탈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실용주의적 산업화에 매진하지 아니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학문도 교육도 그 방향이 실용주의적 응용분야로만 내달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요구된다. 아니 한 세대 전서부터 이미 달라졌어야 했다. 원칙을 가진 기본교육정책과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분야의 강화가 목전의 이익과 상관없이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회계연도에 맞춰야 하는 성과주의, 행정감사에 쫓기는 형식주의적 완벽주의, 유행과 인기 위주의 연구 및 교육 투자, 중앙 및 지방 정치의 교육 및 학문에 대한 수준 이하의 간섭,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에 길들여져서 안주하는 교육계와 학계의 관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착오적 정치이데올로기로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을 장악하려는 행태 등은 시급하게 극복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교육과 학문이 선거 민주주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왔다는 사실이다. 득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치세력들의 작태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일종의 성역이 있는 것이고 교육은 그 최상위의 영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 70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등장하여왔다. 그 시점에서 유권자의 구미에 맞추는 어처구니없는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대개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제시되고 했으나 실제 성공한 정책은 거의 없고, 교육 수요자인 국민에게 대혼란만 야기시키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 교육과 학문의 기본과 기

특별기고



이택휘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정치악용세력 축출
기초학문 지원
장기적 정책 필요

교육자치 폐단 많아
과잉복지도 문제
고등교육기관
구조조정해야

초를 무시한 사상누각의 이벤트성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교육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취학전교육 단계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고등교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고려가 합리적이면서도 진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전투적 정치이데올로기를 가진 세력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마련해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엄정하고 순수해야 할 교육의 현장이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특정 정치세력들의 싸움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시민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어느 중학교의 교사가 '천안함은 조작되었고 차라리 북한이 더 낫다'는 발언을 교단에서 서슴지 않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교에서는 '박정희가 죽었으면 우리 언니(박근혜 대통령)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말을 뱉어내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급기야 이런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가 깔린 선생들의 막말을 듣다못한 어린 학생이 이를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교육기본법은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제 6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현장에서 자행되는 이런 위법행위가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교육자치의 허상(虛像)을 우리는 보고 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그 실상은 어떠한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7개 시 도에서 주민에 의한 직접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교육감은 거의 통제됨이 없이 방대한 교육 권력을 구사하고 있다. 인구 천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48명의 국회의원과 25명의 구청장이 선출된다.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해서 단 한명의 교육감이 선출되고 있다. 과연 그가 천만 서울 시민을 교육의 측면에서 대변할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2면으로 이어집니다.

大韓言論人會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대한언론인회 제 20대 회장 입후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회장은 정기총회 2개월 전에 선거에 관한 일정과 후보등록 절차를 본회 회보(대한언론)에 공고 한다'는 본회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2장 2조 선거공고 및 후보등록(1)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입후보 할 회우는 본회 정관 제13조 (1)항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30인의 추천을 받아 본회 사무국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마감 : 2015년 12월 21일(월) 오후 5시까지

등록 서류 : ① 추천서 30장 (소정양식)

② 등록서 1통 (소정양식)

③ 이력서 1통 (명함판 사진 1장 첨부)

2015년 11월 1일

社団法人大韓言論人會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원로회우)



빨리빨리 자라나라

歴史 교과서 국가 정체성 확립해야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역사 교육, 특히 자기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기억의 공유’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국사 교육은 차세대 예비 시민들을 가르치는 교육적 전범으로 기능한다. 앞선 세대의 성취와 가치관을 후세대에 전달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 길러 내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맹목적인 자화자찬이나 ‘신화 만들기’와 구별되며, 앞 세대가 걸어간 길의 공과와 명암을 객관적으로 살펴 차세대가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기제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와 가장 가까운 근현대사, 그중에서도 당대의 역사를 교육하는 현대사에 대한 교육은 한 나라가 장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교과서는 학교 교과 교육의 기본이 되는 텍스트로 가장 정제화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문제는 학생들이 과연 현재의 ‘역사교과서’를 믿고 공부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교과서마다 다른 해석 가진 8종 교과서

역사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나름대로 근거 있는 판단을 통해 역사 해석을 하는 것으로, 역사교육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교육은 자국의 정체성 함양에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역사교육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다양하게 해석되는 내용들을 존중하고 협의하는 민주적 가치를 지녀야한다. 그런데 현재 검정제에서 한국사 교과서는 ‘1교과서마다 1가지 해석을 가진 8종 교과서’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1965년 베트남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5만 여명의 군인을 파병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현재 고교 A 한국사 교과서에는 ‘경제 개발 등 미국 지원을 받기 위해 서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B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 당시 우리나라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미국과 정치·군사적 동맹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의 폐해로 인해 경제 개발의 계기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니 둘 다 정답이라고 해야 맞다. 당시 베트남 파병은 미국의 요청이 있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또한 이를 통한 경제개발 등을 위한 미국의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6·25전쟁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서술을 보면, C 교과서는 북한군 민간인 학살은 소략하고 미군과 국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재판 결과까지 거론하며 상세히 서술하였으나, 반면에 D 교과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인 국군과 민간인 환자 500여 명 학살, 북한군의 9월 한 달 간 1만 4천여 명 학살, 대전형무소에 있던 1,700여 명의 우익 인사와 가족 학살 등’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아예 민간인 학살을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 학생들은 6·25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교과서마다 다르게 서술된 내용 중 한 가지만 배우게 될 것이다. 현재 검정제

특별기고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현대사

현행 검정교과서 대한민국엔 부정적 北주체사상은 미화

학생 스스로 성숙한 인식갖게 다양한 해석 담아야

에서는 다양한 역사인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가장 타당한 통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민주 시민을 배양하기 보다는 오로지 한가지 역사 해석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진 한국인을 기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교과서 서술의 차이는 남북한에 대한 서술,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 등에서 역사적 관점에 따라 더욱 극명하게 두드러진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은 학생들의 것 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해석 중 교과서에 하나만을 기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만 알게 해서도 안 되며, 교과서 집필진에 의해 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 의해 해석된 역사가 학생에게 주입되어서도 안 된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직간접적인 경험·토론·추체험 등을 통해 자신의 판단으로 더욱 성숙한 역사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에 집필진의 사관이 담긴 서술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함께 그 사실을 둘러싼 다양하고 객관적인 근거·해석들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재의 검정제는 출판사가 소수의 집필진(교수, 교사)을 구성하고 집필진이 단원을 나누어 집필하는 시스템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5~9명의 인원이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이때 집필진의 개인적 역사관과 이념적 성향이 교과서 서술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천안함—연평도 포격 기술 않은 교과서 5종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과 관련한 서술도 분명히 기술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한국사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서술과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거꾸로 북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 우호적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어떤 교과서의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에 대한 서술은 거의 미화수준이다. 이러한 서술은 ‘통일 지상주의’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려 하고, 반면에 민주주의와 천부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하려는 자세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공산 왕정체제적인 부자 세습과

학정,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은 아예 생략하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남북한 양 체제에 엄청난 격차가 생긴 이유가 있을진대 교과서는 그것을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또한, 중·고 역사교과서 총 17종 중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모두가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는 5종이나 되며, 기술된 12종 가운데 천안함 피격 사건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4종에만 서술되어 있어 학생 간 인식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모두는 역사교육이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인식을 존중하고 스스로 역사적 해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국가의 정체성 함양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선도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함에 공감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국정이든, 검정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서둘러서 이 논란을 끝내고 질 좋은 교과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주]

1면에서 이어집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충돌하거나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 자치라는 명분으로 교육감에 의해서 거부될 때 이러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교육복지의 과잉공급이 또한 문제이다. 오늘 도시에서건 농촌에서건 초·중·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해보면 학교 밖에서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학교가 아니다. 더구나 콩나물 교실에서 60명 이상이 붐비며 공부했던 기성세대들에게는 놀랍게 개선된 교육여건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각종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교육 현장에 대한 복지 공약은 도를 넘는다. 결국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넘어오고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넷째 고등교육기관의 무분별한 과잉 설립이다. 한국은 인구 대비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화이트칼라 청년 노동력은 넘쳐나는데 산업 현장에 블루칼라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외국 노동력의 수입이 200만을

육박하고 있다. 대학 지원자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고 있는데도 일류 대학 입학을 위한 엄청난 고가의 사교육 기관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 아직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검증한다는 취지의 수능능력시험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도 정원미달에 허덕이는 지방대학들이 다투어 모셔가는 상황인데.

다섯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교육감이 교체될 때마다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새로운 범주의 교육기관이 각급교육수준에 추가된다. 그러다 보니 진학을 앞둔 학생이나 그 학부모들조차도 헛갈려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를테면 고등학교의 종류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필두로 자립형 사립학교, 공사립 특목고(외고, 과학고, 예고, 체육고 등), 영재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등, 다양하다. 다양성이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는 있겠지만 지능이나 도덕성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자칫 결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전교조 청산이 교육 살리는 지름길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먹고살기 어려워도 자식은 가르쳐야 한다는 우리나라 교육 열이 영국에서 200년, 미국에서 150년 걸린 산업화를 우리는 반세기 만에 이루어냈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루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교육의 힘이었다.

전교조의 '민중혁명교육' 내용

1989년 창립된 전교조는 이적단체로 해산되었다가 1999년 김대중 정권에서 합법화되었다. 합법화된 전교조는 친북반미 반정부 이적교육을 일삼으면서 공교육 붕괴를 가져 왔다. 김대중 정권이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고 파면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을 사면 복권시켜 학교로 발령을 냈다. 민주투사라는 이름으로 복직된 전교조 교사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교장은 밥이고 교감은 반찬”이라며 타도대상으로 삼아 투쟁하여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이념전쟁터’로 변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학생들에게 국민의례(태극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대신 민중의례(혁명구호 제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노동열사에 대한 묵념)를 행하게 하면서 많은 학교에서 애국조화가 사라지고 교실에선 태극기도 사라졌다. 전교조의 ‘민중 혁명교육’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기피대상이 된 전교조

전교조의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과격한 활동 때문에 전교조 가입자가 급감하여 2003년 93,000여명이던 조합원이 2015년 50,000여명으로 급감했다.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껴 전교조 전체 조합원 중 20대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전교조 담임을 기피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되면서 존재감마저 상실하고 있다.

2014년 전교조는 ‘교원 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정치활동·단체활동 금지)에 대해 현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현재는 교원노조법 2조와 함께 3조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교원노조법에는 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전교조규약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 요구 등) ②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비합법노조 통보요구를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4개월째 미뤄

공무원노조가 비합법노조 판결을 받은 것은 규약에 파면 해임된 조합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노조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불응한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을 하고 교원노조법 2조(현직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가 위헌이라는 전교조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특별기고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정치투쟁에 염증 조합원 급격 감소 ‘법외노조’ 확정판결 시급

시민단체 감시 강화 ‘좌편향’ 고발 학부모도 나서야

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현재는 2015년 5월 28일 합헌판결을 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린 것이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서 법외노조로 판단한 것을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된 판결을 4개월 째 미루고 있다.

전교조 15년. 공교육은 곳곳에서 붕괴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선 제구실을 못하고 반정부 등 정치구호를 외치는 장으로 변했다.

정치투쟁 무능 저질교사 퇴출시켜야

이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경쟁을 ‘학교 간 경쟁’ ‘교사 간 경쟁’으로 바꾸고 교원평가에 의한 승진과 성과급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교사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무사안일에 빠져 정치투쟁만하는 무능 저질 교사를 퇴출시키면 그 대상이 바로 전교조 교사가 될 것이다.

첫째, 서울고등법원은 법외노조 판결을 서둘러야 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15년간 합법노조 행세를 하면서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아오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합법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 현재에 헌법소원을 내고 대법원에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교원노조법 2조(현직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고, 대법원은 2015년 6월 3일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둘째, 전교조 불법행위에 대하여 교육부가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전교조는 그동안 연가투쟁, 교원평가법 반대 투쟁, 시국선언, 집단정치활동, 좌편향적 수업,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좌익단체와 폭력시위, 좌익교육감 선거운동, 성과급 거두어 공평하게 분배 등 수없이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다. 그러나 초중고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교육부에서 징계한 일이 거의 없다. 전교조가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해 온 것이다. 교육부가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전교조 불법행위를 반감시킬 수 있다.

셋째, 학부모들이 나서야 한다.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비행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이 ‘불모’로 잡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하는 전교조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교조 교사 비행 신고센터를 만들어 학생들의 신고를 받아 여론화 시켜 가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나선 사례는 거의 없다. 우리 어린이들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학부모들이 전교조 불법 행위를 여론화 시키면서 퇴출운동을 벌이면 전교조는 발붙일 곳을 잃게 된다.

넷째, 애국시민단체의 전교조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전교조 좌편향교육 고발센터를 만들어 신고 된 전교조 교사 5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전교조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녹음이 두려워 함부로 좌편향 교육을 못하게 만들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시민단체에 전교조 교사들의 비행에 대하여 신고하고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하는 이런 과정을 밟으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수업을 막을 수 있다.

전교조는 ‘참교육’이란 미명으로 국민을 속이고 15년간 ‘민중 혁명교육’을 통해 많은 20~40세대를 의식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전교조 의식화교육이 시작되면서 남북갈등보다 남남갈등이 더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공교육은 붕괴되고 어린 학생들은 학교를 버리고 학원으로 떠나 1년에 수십조원의 사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 청산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이제 국민들이 전교조의 실체를 알고 전교조 척결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 [국문]

2면에서 이어집니다.

3. 가야할 길은

첫째 우리 교육은 정치로부터, 특히 구시대적 정치이념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는 세력을 추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정한 법치가 준엄하게 작동해야 한다.

둘째 현재와 같은 교육 자치의 결함과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합리적으로 연계하거나 양자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불협화음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육복지가 선거민주주의에 의해 낭비되거나 불균형의 초래를 막기 위해

전문가집단에 의해 합리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전국규모에서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다른 연관 사회정책과의 조화를 강구해야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실효성 있게 구조조정해나가고, 원칙적으로 그것은 자유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며,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수험능력시험은 중지해야 한다.

다섯째 보통교육체제를 지나치게 다원화하지 말아야 하며, 각 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서 이른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통교육과정에서 수월성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동시에 고등교육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기초학문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집약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 [국문]

美-中 경쟁 ‘安保 최우선’ 대응하라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사이에 모순은 없다”고 하면서도 “중국이 국제규범과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한국도 우리처럼 그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중국 경사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암시한 것이다. 우리 외교당국은 ‘피로 맺어진’(blood bonded) 난공불락(invincible)의 동맹이라고 평가하지만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수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G2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해답을 구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의 딜레마

미국은 여전히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협력 없이 유럽의 재정위기, 테러리즘, 인종갈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환경문제 등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도전들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세계도처에서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과 세계 최초의 대함탄도미사일을 배치하였으며, 남중국해 7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미국의 태평양지역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미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도전, 즉 ‘반접근/지역거부(A2/AD)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태평양에 신행 항모와 잠수함 및 연안전투함 등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인정 등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범세계적 경제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중앙아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동남아-아프리카-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미국 및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와 무역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균형전략과 글로벌 파워(global power)로서 중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시진핑 주석의 신형 대국관계론은 겉으로는 양국간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견제가 진행되고 있다. 양국간 ‘경쟁과 견제’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첫째는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아태지역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외교적 차원에서 아세안지역포럼(ARF) 및 아시아안보대화(ASD) 등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에 적극 참여하여 우방국 및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적 차원에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적극 추진하여 미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것이다.

특별기고



구본학

·한림대 국제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中과의 경제협력 韓美동맹약화 안되게 美國에 확신줘야

다자간 협의체 통해 美-中 이해관계 조정 國益목표 분명히 할때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세력경쟁 속에서 우리는 전통적 동맹인 미국과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로에 서있다. 올해 초부터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문제, AIIB 가입문제,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여문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충돌로 인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아 왔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인 반면, 한중 경제교류가 한미 및 한일 경제교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이다.

줄타기외교는 양측 모두에 버림받을 수 있어

지난 수년간 우리는 미중간의 경쟁과 견제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왔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균형외교’, 상황과 국익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는 ‘편승외교’ 또는 ‘실리외교’, 미중간의 마찰과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중견국외교’ 등 다양한 논리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는 자칫 양다리외교 또는 줄타기외교로 인식되어 양측 모두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충돌 또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고,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안보를 잃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즉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한중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미국에 대해 한중 경제협력 확대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미중 갈등을 완화시키고 협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을 직접 중재하기보다는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미중관계가 제로섬(zero-sum)이 아니라 포지티브섬(positive-sum)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호 경쟁과 견제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양국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응(reaction)과 반응(response) 위주의 ‘눈치보기’ 외교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국익과 외교정책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고 설득함으로써 지지를 확보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21세기 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노쇠한 청이 쇠퇴하고 일본이 부상하던 구한말 정세와 같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국가 간의 관계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로지 국가이익만 있다는 오래된 경구도 있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4]

내년도 언론진흥기금 예산의 정부 안이 사업비 기준으로 올해보다 약간 감소한 231억9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전년 대비 4분의1 가량을 삭감하려 했으나 논란 끝에 예년 수준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기금 잔액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출 규모만 작년 수준을 유지했을 뿐 기금의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신문협회는 지적했다.

지난 8월 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언론진흥기금 사업비 예산을 231억9700만 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90억2500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올해에 비해 6300만 원, 4억7500만 원씩 각각 줄어든 규모이다. 이자수입 23억, 융자원금 36억, 법인출연금 100억 등을 포함한 언론진흥기금 전체 예산은 334억9600만 원으로 올해(412억7700만 원)보

다 77억8100만 원 줄었다.

내년도 언론진흥기금의 지출은 ▲뉴스미디어진흥 ▲뉴스유통구조개선 ▲언론공익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융자사업인 신문발전인프라구축 지원은 폐지됐다. ▲뉴스미디어진흥에 106억8100만 원 ▲뉴스유통구조개선에 41억7200만 원 ▲언론공익사업에 83억4400만 원으로 편성됐다.

문제는 올해 연말이면 언론진흥기금의 잔액이 175억9600만 원, 내년 말이면 99억3900만 원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내년 중 기금이 고갈된다는 점이다. 기금의 존속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재원 보충 방안이 꼭 포함돼야 하

‘언론진흥기금’ 고갈위기 신문업계 준비상

지만 기재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신문협회는 고갈 위기에 처한 언론지원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고 출연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10월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2016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언론진흥기금 잔액이 9억 원 정도에 불과해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보충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지원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당장 내년 이후부터는 기금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결국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는 기금 설치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기금사업 수행을 위해 2016년 적정 규모의 국고 출연이 반드시 이뤄져야할 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더욱이 내년 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종료될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 역시 내년 말 폐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거나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일반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도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國監 올해도 저질-불량 못벗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마저 결국 부실·졸속에다 저질·불량 행태로 끝난 꼴이다. 민생국감, 상생국감이란 약속은 간 곳 없고, 당리당락에 매몰되거나 특권의식에 젖어 피감기관이나 증인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역대 국회 최악의 국감이란 혹평을 받았다. 여야 당 지도부마저 “당내 문제로 국감에 집중 못해 소홀했음을 반성한다”고 고백했다.

無恥에다 유아독존형 군림행태

왜 국회가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부실, 저질국감 행태를 고치지 못할까. 한마디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이라는 자만심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치(無恥)에다 ‘국감무용론’ ‘국감폐지론’이 나와 본들 ‘말뿐이 아니냐’는 유아독존 식 착각 때문이다.

역대국회가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무시해 온 것은 대물림돼 온 악습이자 기득권 의식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올해 국감은 19대 과장국회로 ‘마음은 콩밭’에 두고 당내 공천룰 싸움과 선거구 획정에 정신이 팔려 속빈 호통으로 때웠다. 그런데도 의욕을 보인다고 13개 상임위의 피감기관 수가 700곳이 넘게 사상 최대로 늘리고 자료제출도 잔뜩 요구했으며 재벌총수와 CEO 등 기업인 증인도 수백 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질의와 증언청취는 수준미달로 국감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피감기관장이나 증인들을 마치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인사청문회 자질심사 하듯 너무나 고압적인 자세였다. 국감장은 참관석이 넘쳤지만 질의 응답이나 증언 한마디 못하고 온종일 하품하며 여야 간 정쟁싸움이나 관전한 이들이 수도룩했다. 이 때문에 국감장에 불려 갔다 온 사람들에게 소감을 물으면 속으로 “국회의원 물갈이는 없느냐”고 반문할 것 같은 느낌이다.

꼴불견, 저질, 악담 등 망신자초

종래의 권위주의식 국감행차와 피감기관들의 과잉접대 악습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나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서울고검에서는 검사장 10여명이 줄지어 서서 마중하는 모습에다 국회의원 승용차를 특별히 구내 잔디밭으로 주차안내 하는 등 영 꼴불견이다.

안행위 국감에서 경찰총수에게 “권총 사용법 시연해 보시라”고 요구한 발언이나 재벌총수에게 “한·일간 축구시합 때 어느팀을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은 저질 졸작의 표본이다. 또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둔 피의자 신분 국회의원이 대법원 국감에 참석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자질 미달 아닌가. 내년 공천을 의식한 듯 정책질의 대신에 지역구 민원을 잔뜩 늘어놓는 모습도 꼴불견이고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사건,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혐의 재탕 질의도 듣기 민망했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성과라면 방사청의 한국형 전투기(KFX) 국산화 관련,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는데도 이를 은폐해 온 사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박



배병휴

·본회 회우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공천룰 싸움 등 ‘마음은 콩밭’에 저질 미달 행태 여전

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념-정치공세 난무

연중 상시국감 도입 적극 검토 할 때

근해 대통령의 방미에 수행한 국방부장관이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기술이전 거부방침을 거듭 확인하지 않았는가.

방사청 관계자들이 이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지만 늦었지만 KFX사업의 재검토가 불가피해 졌으니 국감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직무 상관없는 유도성 질문

올 국감이 지나친 이념공방과 정치공세로 일관한 모습도 저질 불량대목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보지만 교육부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아예 노트 북에 ‘국정교과서는 친일, 독재교과서’라는 구호를 붙여놓고 정치공세를 펼쳤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어찌 친일과 독재미화를 의미하는가.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라는 저질 악담이 국감장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편중,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왜곡을 바로잡자는 것이 어찌 여야의 정치적 이해와 상관되는가.

이념공방이나 정치공세가 국감의 본질을 훼손시켜 국민과 국론을 분열, 어떤 정치적 이득을 누리려는 심산인지 알 수가 없다.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유도성 질문으로 야당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답변을 이끌어 낸 것은 분명 정치적 과란을 몰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고영주 이사장의

오늘의 니대르

이흥우 (본보 편집위원·상명대 석좌교수)



답변은 그의 경륜에 비취보면 솔직한 소신답변으로 방문진의 직무와 상관없는 유도성 질문의 결과였다. 이를 두고 ‘한국판 매카시’라 공박하고 사퇴압력, 해임추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감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닐까.

교문위 국감의 논쟁이 지루하여 밤늦게 다시 국회방송을 시청하니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양당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어하지 못해 찢찢대는 모습이 었다. 위원장이 피감기관과 증인들이 무한정 대기하는 모습이 미안하여 “그만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한 후 “지금 이것이 오늘의 국회모습”이라고 자탄하기도 했다.

당내 계파 간 격전

올 국감기간 중 여야 당대표가 당내 리더십 동요로 흥역을 치렀다.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신임 투표 제안으로 당내 계파세력 간 생존다툼이 극심했다. 양당 대표가 추석날 회동을 통해 ‘안심

번호 국민공천’ 방안에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분만 격화시켰다.

새누리당의 공천룰은 친박과 비박 간 사생결단으로 죽이 될지 밥이 될지 오리무중이고 농어촌 의원들의 선거구 축소 결사반대 시위로 선거구 확정 당론을 결정하기가 까마득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대표가 반쪽 재신임을 받았지만 ‘물갈이 20%’ 혁신안을 두고 친노·비노 간의 죽기살기 식 공방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이와중에 중진 8인은 ‘통합행동’을 결성, 통합전당대회 소집을 요구하고 호남민심 측에서는 조기 선대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양당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쫓기고 있으면서 민생국감, 상생국감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것은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는가. 반면에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신들은 차기 공천의 향방에 낮이 빠져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저질·불량국감이라는 비판 목소리마저 꺾전에 들리기나 할까.

이 때문에 국감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국회개혁을 정치권에 맡겨둘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쌓여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이 출범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서류감사 방식도 검토해야

국회의원으로 당선만 되면 각종 특권을 부여 받아 임기 내내 유아독존 식으로 군림하는 제도 하에서 국회의 입법기능이나 국감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여론이 대다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 늘리고 자료제출 요구 많이 하고 증인채택도 많을수록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는 상임위별 권위와 의욕을 과시하는 비효율, 비능률을 뜻할 수밖에 없다. 올해 13개 상임위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시하려면 하루에 평균 5곳 이상을 끝내야 하는 계산이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결과 피감기관장과 수많은 증인 등을 불러다 놓고 질의응답 한번 없이 돌려보내는 악습을 되풀이해야만 했다.

국감은 예산심의에 앞서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간에 대중 감사로는 별 의미가 없다. 연중 상시 감사제도를 연 구해야 하고 감사기간 전에 서류감사, 서면질의 감사로 걸러내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제한된 시간에 질문만 늘어놓고 답변은 서류로 보고하라는 장면도 여러 번 지켜봤다. 그러므로 사전에 감사항목을 서류나 서면질의로 걸러낸 후 국감일정에 맞춰 압축, 효율적으로 감사하면 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국감]

TPP가입 늦었지만 적극 나서라

누구에게나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경우 그 결과는 한 마디로 가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일의 내용과 크기에 따라 그 결과도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대로 했을 경우 그 결과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부정적이고 비관적 비극적이며 물질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동반한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국가 차원의 일이라면 잘 못된 결과의 정도는 결코 작을 수 없으며 재앙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한 국가와 민족이 소멸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이라든가 가까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 등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군사 및 경제 측면의 대표적 참사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당파싸움에 묻혀 그냥 넘어가 왜란을 자초했다. 경제 펀더멘탈이 괜찮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가 국가부도 직전의 외환위기였다.

지구촌 최대의 다자간 경제블록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혹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이다. 태평양을 둘러싼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5년 10월 5일(현지시간)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FTA인 TPP 논의의 참여 기회를 놓쳤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상황이라 뒤늦게 가입한다 해도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불리한 처지를 맞게 됐다. TPP는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의 소규모 FTA로 시작됐으나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협상이 본격화 됐다. 경제규모 1·3위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페루 외에 최초 4개국을 합쳐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 12개국의 인구수를 합하면, 전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GDP의 37.1%, 교역 비중은 25.7%에 달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지구촌 최대의 경제블록이 탄생한다. TPP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인데도 한미FTA 등 양자 FTA 이상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TPP의 의미와 가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외교·안보 동맹 성격을 띤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동맹체가 TPP라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이미 분명히 했다. 그는 TPP 타결 환영 성명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내버려둘 순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TPP 타결 후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아태 지역에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같은 TPP에 당초 협상 대열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처사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큰 실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TPP 참여를 두고 찬성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뒤늦게, 그것도 12개 참여국 간의 다자간 협상이 어렵게 타결된 후 참여의사를 공식화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참여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이명박 정부 이래 중대한 판단 잘못 값비싼 수업료 물듯

경제도약·안보강화 두마리 토끼 겨냥 美지렛대 활용을

왜 그랬을까.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말 캐나다와 멕시코가 TPP 협상에 참여함과 동시에 일본이 협상 참여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보고도 당시 통상교섭권을 갖고 있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TPP 참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 통상교섭본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이어받은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로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 국제통상시스템이 양자 간에서 다자간 체제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도 정부는 한·중 FTA와 같은 양자협상에만 급급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 전략적 판단 미스와 실기, 그로 인해 치러야 할 값비싼 수업료에 대해 반성하는 이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정부 자세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한·중 FTA에 일이 많아 쟁길 사람이 없다며 미국의 참여 제안을 건너차기도 했던 정부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말의 레임덕 탓으로 돌리지만 이 역시 변명이다. 현 정부에서도 기회가 있었지만 실기하고 말았다. 정부는 TPP가 한·중 FTA와 별개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협상에 참여할 것처럼 장담했지만 결과는 전혀 아니었다.

전략적 가치 간과 소극대응하다 失機

가장 높은 수준의 FTA 운용하더니 가장 낮은 수준의 FTA로 끝나버린 한·중 FTA에 치중하다 더 큰 시장인 TPP를 날려버리면서 기존의 한·미 FTA조차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한국 통상외교는 길을 잃고 어정쩡하게 중국에 매달려 온 셈이다. 정부가 TPP 회원국에 참여할 기회를 놓친 건 한·미 FTA가 체결됐고,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TPP 협상에 참여하는 게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TPP의 전략적 가치를 간과한 탓이다. 대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는 참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미국에선 ‘한국이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TPP 가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건 옳은 판단이다.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을 거듭 밝힌 데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도 이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로 화답하면서 양국은 TPP라는 경제 의제를 사실상 공유하게 됐다. 지난 2012년 FTA 발효로 미국과의 교역사(交易史)를 새롭게 쓴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TPP를 통해 새로운 경제동맹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10월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점에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앞으로 과제는 TPP 12개 회원국과 어떻게 협상해 유리한 가입 조건을 끌어내느냐다. 한국은 이미 TPP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래서 TPP 가입은 사실상 일본과의 FTA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뒤늦은 TPP 가입을 경제도약과 안보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차제에 국내 정치의 종속변수로 전략해 버린 통상정책의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 마비된 통상정책 점검 메커니즘을 재가동해 전체 통상정책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문]

사우회보 다양한 소식실어

국민일보

지난 10월 16일자로 회보를 발행했다. 이형용 사우회장의 “일하는 사우회 함께 갑시다” 1면 기사가 돋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사우회 소식을 실었다. 최삼규 국민일보 사장에게 듣는다(2면)와 22면 시계를 거꾸로 돌린 ‘함빠꾸’ (함정훈 대한언론인회 편집고문·전 국민일보 편집국장의 애칭)기사가 압권이다.

사우회 재정자립기반 조성 박차

서울신문

9월 30일자로 사우회보 31호를 발행했다. ‘사우회 발전기금 붓물’ 소식을 머리기사로 해 나온 이번호엔 사우회 사무실 개선 소식(6면), 사우동정 등 다양

사우회 소식

한 소식들이 실렸다.

회장대 장기호 회우 재추대

신아일보

지난 10월 27일 12시 30분 서울 서소문 배재반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장기호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여성위원회 창립

KBS

지난 10월 1일자로 사우회보 162호를 발행하고 1면 머리기사로 국내 언론사 사우회 가운데 첫 여성위원회의 공식 조직인 KBS사우회 여성위원회가 9월 18일 출범했음을 자세히 알렸다. 사우회 지역 소식을 비롯해, 가을철 바둑

행사(9월 30일), 회우 92명이 저술서 238종을 기증한 소식과 본회 문인수 회우의 여성위원회 출범 축하 메시지(4면 특별기고)가 눈길을 끈다.

2015 연우회 만남의 날

연합뉴스

10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종로 1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5층 더 뷔페 ‘광화문점 마루 홀’에서 연우회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또한 9월 10일자로 연우회보를 발행했다.

사우회보 27호 발행

CBS

지난 10월 15일자로 사우회보 27호를 발행

했다. CBS 한용길 9대 사장의 인사말을 머리기사로 조준택 전 사우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 한용길 CBS사장의 사우회 방문, CBS 사우회와 좋은 상조 간 MOU체결 소식 등을 비롯해, 각종 친목 모임 소식을 실었다.

12월 7일 2015 정기총회

SBS

오는 12월 7일 오후 6시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송년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월 1일자로 사우회보 36호를 발행한 SBS 사우회는 1면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10월 22일 단풍여행, 8개 동아리 활동(2면)등 다양한 사우회 소식을 실고 있다.

물을 돈쓰듯 아껴야 할때 다가온다

최근 충남서북부 지역에 42년만의 가뭄으로 이 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유일한 광역상수원인 보령댐은 현재 저수율 22.4%로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전국 17개 다목적 댐도 저수율이 50% 이하로 나라의 ‘물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댐 44.7%, 충주댐도 41.2%만을 댐도는 실정, 내년 봄에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중단 사태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I. 수자원의 중요성

물은 우리 인간에게 필수재이다. 우리 몸 전체의 70~90%가 물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하루에 2.5~3L의 물을 마셔야 한다. 우리 몸은 물이 1~2%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거의 혼수상태에 돌입하며, 12%가 부족하면 죽음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금수강산(錦繡江山)에, 산자수명(山紫水明)해서 맑은 물을 얻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물은 공짜, 즉 싼 것의 상징이었다. 지금도 우리일상대화에서 지난 날 ‘물의 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물 먹인다. 물 먹었다’, ‘돈을 물 쓰듯 쓴다’.

그러나 이제 물은 공짜 즉 자유재가 아니다. 맑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수도물은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엄연한 ‘공산품’이다. 물은 석유에 뒤지지 않는 수자원(水資源)의 반열에 올라섰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자원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그래서 물을 ‘블루 골드(푸른 황금)’라고 부르는 시대이다. 과학자들은 21세기에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자원대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국가 간 경쟁은 수자원보유국가와 못 가진 국가 간의 경쟁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의 르완다, 부룬디 등 여러 나라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사망한 사람의 수가 내전(內戰) 전사자의 수를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II.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7mm로 세계평균의 1.6배로 많은 편이나, 1인당 강수량은 인구 과밀로 세계 평균의 1/6정도로 수자원 빈국이다. UN은 이미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였고, 앞으로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 경고했다.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징을 보면, ① 강수량이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분포의 변동이 커 수자원 관리가 어렵다. 특히 계절별로 보면 전체 강수의 2/3가 6~9월에 집중되어, 여름에는 홍수, 겨울과 봄철에는 가뭄이 빈발한다. ②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이상홍수 및 가뭄이 계속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여름 집중호우는 강화에 1일 최대 620mm가 내려 과거 최대치강우 기록을 갱신했고 올해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62%, 중부지방은 50%에 불과해 가뭄이 심각하다.

III. 우리나라 수자원의 위기

우리나라는 수자원의 양적·질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들이 수자원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정한 위기’이다.

1. 양적인 위기

-용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량이 부족해 1993년 유엔 산하 인구행동연구소(PAI)는 한국을 물 부족국가로 분류, 2025년 물기근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댐 수몰보상비와 개발단가 증가 등 개발여건악화에, 댐 개발에 대한 지자체, 환경단체, 지역사회의 반발과, 자기 고장에 혐오시설입지를 기피하는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 때문에 신규 댐 개발은 착수 자체가 어렵고 지난 1998년엔 동강(영월)댐 건설이 취소되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이지만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커 호남 서해안권, 내륙 중부권에서는 물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울산, 포항은 약간의 가뭄에도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현대자동차, 동해펄프 등은 공장의 조업중단 사태가 발생한다.

-하천개수율이 평균 81%로 저조한데다 현재 전국 다목적 댐의 홍수조절능력이 24억t으로 홍수 시 바다로 흘러가는 유출량 753억t의 3%에 불과해 홍수 피해는 불가피하다.

2. 질적인 위기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등 하천 수질사고와 오염으로 수도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 현재 수도물을 마시는 사람이 전체국민의 5.4%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만든 공산품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불신한다는 얘기다. 현재 음용수는 비싼 생수가 대세이다.

-현재 하천과 댐의 오염과 녹조현상으로 한강, 팔당댐,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하천의 수질이 3급수로 전락 위기에 놓여 있어 수도물 생산을 위한 취수원



이태교

- 본회 회우
-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현 서울사이버대학 석좌교수

한국 이미 물 부족국가 내년 비상사태 우려 2025년엔 기근국가로

중소 댐 건설 박차 물값올려 소비억제 근본대책 서둘러야

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도시와 농촌 지하수의 약 6.5%가 오염 상태이다. 미래 대체수자원의 대표주자인 지하수에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이다.

3. 관리상의 위기

-물 문제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즉 싼 물 값 때문에 물 낭비, 투자재원확보 곤란→노후 수도관 교체부진, 신규시설투자 지연→ 수도물 품질저하 → 국민 불신 초래, 비싼 생수 소비 증대 → 그러면서도 물 값 인상은 반대한다. 좋은 물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지갑은 열지 않겠다는 심리이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물 값은 생산원가 814원의 79.7%에도 못 미치는 톤당 649원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외국 물 값의 1/3~1/6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 1,309원, 미국 1,588원, 영국 2,307원, 프랑스 2,543원, 독일 3,305원, 덴마크 4,163원이다.

-전국 수도누수율이 놀랍게도 16%를 넘었다. 노후 관로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안전한 물인데 관로배송과정에 오염되고 만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체계는 수량은 건교부, 수질은 환경부소속으로 돼있어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 과거 거의 해마다 홍수 시 공직자들의 사전 기초시설점검 소홀과 오염단속 미이행 등 공무원의 관리 부재와 직무태만으로 대형재해가 발생해 왔다.

4. 국민의식의 위기

-환경오염에 관한 한 모든 국민이 가해자(加害者)이면서도 피해자로 착각하고 있으며 지금도 물을 ‘물 쓰듯’ 낭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물 소비 수준은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각국의 1인 1일 물 사용량을 보면 한국 332L, 스페인 176L, 스위스 288L, 일본 320L, 이탈리아 322L, 중국 366L, 미국 455L로 우리나라가 단연 정상급에 속한다.

-우리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도 낙제점이다. 홍수 시 강가에 위치한 공해공장들은 비밀배출구로 오·폐수를 계획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농촌에서는 농약병투기, 비료 과다살포에, 공장과 광산에서 버리는 폐수방류 등으로 강의 원천인 산촌의 실개천부터 죽어가고 있다.

IV. 위기 극복 대책

1. 정부의 대책

-수량의 확보가 시급하다. 수량 확보는 홍수 시 바다로 유출되는 물을 잡아두는 ‘물 창고’인 댐의 건설이 해결책이다. 수량의 확보 없이는 질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저항이 심한 대규모 댐 건설 대신 손쉬운 중소규모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해수의 담수화,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기왕에 확보해놓은 16개 보에 저장된 물 6억2000만t과 최근 낙동강과 금강 하구둑을 준설해서 새로 늘어난 1억톤의 물을 상습 물 부족지역과 현재의 가뭄지역으로 보낼 송수관을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이밖에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 기존 댐 최적 관리 * 신규 대형댐건설 * 중소규모의 댐 및 소규모 용수전용 댐 건설 * 기존 댐과 저수지 재개발 * 수자원의 부존편차를 줄이기 위해 강과 강을 연결하는 유역변경식(流域變更式) 수자원 이동대책 수립 * 광역상수도 시설의 확충 * 노후상수도관의 교체 * 지하수 개발, *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다시 쓰는 하수도 정책전환 등 대책이 시급하다, 새로운 용수원의 개발을 위해, * 지하댐의 건설, * 해수의 담수화 * 중국이 이미 시험하고 있는 인공강우를 이용한 보조 수자원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물 값 인상으로 물의 과소비를 방지하고 그 재원으로 노후 수도시설 교체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신축 중·대형건축물에 대한 허가조건으로 중수도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는 절수형 수도기기를 개발, 보급 확대해야 한다.

-한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수량은 건교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누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한편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급선무는 정부가 제조한 물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2. 기업과 국민의 실천

기업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규정대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하고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처럼 민형사상 징벌적 벌금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물 보호를 위해 애수(愛水) 절수(絶水) 친수(親水) 삼수운동(三水運動)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한편 우리는 물에 대해서 ‘가해자’이고 ‘좋은 물을 마시려면 응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혁명적 의식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제 물은 석유에 버금가는 귀중한 ‘자원’이다. 물을 ‘돈 쓰듯’ 절약해야 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E]

39년만에 되살린 ‘유엔의 날’ 기념식

동아시아가 편하지 않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로 되돌아가려는 듯 일본과 중국은 막강한 군비경쟁에 들어섰고 18세기 이래로 동방진출을 노려온 러시아는 지금 중동에서 무력을 과시하면서 일본과 중국이 벌이는 동아시아군비경쟁에 합류하려는 듯 먼 포성을 울리고 있다.

1945년 유엔이 설립되면서 정립한 “침략전쟁은 기본적으로 무효이며 범죄”라는 유엔정신을 잊어버린 듯하다. 대한민국은 전쟁은 무효이며 범죄라는 유엔정신과 인권의 존중, 평화구축 및 국제조약의 준수라는 3대 철학을 갖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 유엔으로부터 처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나라이다.

1947년 유엔의 첫 한국문제결의안을 통해 한반도에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이 탄생했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을 그해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48대6의 압도적 지지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일어나자 유엔은 한반도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이 소련제 T34등 최신무기로 짓밟히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즉각 인류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유엔군을 구성하여 낙동강전선, 인천상륙작전, 장진호전투 등에서 희생적 전투를 해 대한민국을 지켰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유엔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1950년 12월24일 유엔 창설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유엔의 노래’도 지어 부르면서 엄숙한 유엔의 날 행사를 했다. 1975년까지 국경일 휴일로 지켰다.

1975년 유엔에서 남북한 결의안이 동시에 통과된 것을 계기로 유엔의 날이 국경일에서 국가기념일로 변경되었다가 뒤에 흐지부지 유엔의 날 행사가 사라졌다. 1976년 판문점 중립국감시구역에서 유엔군복장의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정일화

·본회 회우
·전 한국일보 워싱턴특파원

회담도 중단해 버렸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유일합법 정부로 승인된 이후부터 유엔반대정책을 폈고 특히 6·25남침전쟁 때 유엔이 북한과 중공을 침략자, 평화의 파괴자로 낙인찍자 더 큰 반발을 했다. 이런 북한의 반

유엔의 날 기념일을 지키지 않았고 유엔기를 태극기왼쪽에 달아야 된다는 국가계양법이 있는데도 유엔기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지난 8월 재향군인회, 성우회, 대한언론인회, 대한여성언론인연합, 6·25 참전언론인회, 라이스업 코리아 등 30여개 단체와 관련이사 30여명의 이름으로 유엔의 날 기념협회(가칭·의장이인수·사무총장 정일화)를 구성하여 정부에 유엔의 날 기념일 행사를 재개할 것을 소청했다. 정부는 행사를 재개하는 대신 유엔의 날 기념협회의 기념식에 화환을 보내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10월 24일 유엔의 날 기념협회는 정의화 국회의장, 황교안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화환과 각계의 축하메시지를 받으면서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컨벤션 센터에서 엄숙하고도 감격적인 39년만의 유엔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엔의 날 회복을 소청했던 정기승 전 대법관,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정진태, 안준부 장군 등 예비역장성, 박지태 목사 등 종교계, 이도형, 김은구, 홍원기, 박기병, 신동식, 임덕규 씨 등 언론계인사와 각계 인사 2백50여명이 참석했고 미8군사령관을 대신하여 한국전쟁참전용사의 아들인 프리드만 미8군 의무사령관, 팀 피터스 선교사가 축하객으로 참석했다. 유엔의 날 기념협회는 매년 유엔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유엔정신의 교육 및 유엔을 통한 직업진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4]



39년만에 열린 유엔의 날 기념식에서 태극기와 유엔기를 흔들고 있다.

살해하는 등 북한은 극렬한 반(反)유엔정책을 표출했다.

1991년 소련연방해체 후 북한은 중립국감시위원회인 폴란드와 체코대표도 추방했고 판문점에서 열리는 정전

유엔정책이 널리 남한에 깔려지면서 유엔의 날 행사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92년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 후에도 대한민국은 법률상 건재하고 있는

6·25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를 참관한 본회 회우들은 6·25전쟁 3대 대전의 하나인 춘천전투의 필승 전의(必勝 戰意)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방부 초청으로 본회 김은구 회장, 홍원기 명예 회장, 6·25참전언론인회 박기병 회장 등 25명의 회우들은 10월 17일 춘천역 앞 광장에 설치된 춘천지구전투 전승기념식 및 전투재연 현장에서 6·25전쟁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한 전쟁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전화(戰禍)의 참상을 되새겼다.

65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국군 제6사단은 춘천지역으로 남침한 북한군 2개 사단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하였다. 당시 제6사단은 춘천 전방의 제7연대, 흥천 축선의 제2연대와 제19연대를 배후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 2개 사단을 3일간 저지, 방어하는 데 성공하여 국군의 한강방어선 구축 및 유엔군의 증원 여건을 보장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당시 춘천지구전투는 열세한 전투력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적극적 방어와 효과적인 화력운용, 군관민(軍官民) 혼연일체의 총력전 전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전과를 올렸

‘北탱크 육탄저지’ 재연에 숙연

본회 회우들, 6·25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참관



6·25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 참석한 회우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다. 적의 포탄이 날아오는 가운데 포병 16대대는 춘천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춘천사범학교 학도호국단의 참전열의로 5,000여발의 포탄을 날라 전투 기간 내 포병화력의 위용을 과시, 6·25전쟁

초기에 첫 방어전을 폈다. 김일성은 작전실패 분풀이로 군단장과 사단장을 전격 해임시켰다고 전해진다.

오후 2시 시작된 전승 재연 행사에서 특히 피난대열에 나섰던 시민 학생들이

군관(軍官)과 하나 되어 국군을 지원하는 장면, 화염병 수류탄으로 북한군 탱크를 육탄저지 파괴시키는 특공대 상황을 재연하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숙연해졌다. 이어 계속된 공군특수비행대의 블랙이글쇼와 특전용사들의 무술시범과 태권도, 그리고 육·해·공, 해병대, 여군 합동시장대의 숙련된 시범에 우렁찬 박수가 쏟아졌다. 손에손에 소형 태극기를 흔들며 ‘아아 잊으라 어찌 우리 그날을…, 6·25의 노래를’ 합창하면서 ‘자유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구를 가슴에 되새겼다.

이날 회우들은 오전 9시 50분 국방부가 제공한 버스로 울긋불긋 장관을 이룬 경춘가도 깊어가는 가을 산하를 달려 샘밭막국수로 중식을 들고, 행사 참관 후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장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춘천 MBC를 방문, 최윤태 보도국장의 안내로 방송국 시설을 둘러본 뒤 춘천 MBC가 제공한 닭갈비, 막국수, 막걸리로 덕담을 나눈 뒤 야로(夜路)를 달려 귀경, 밤 10시 20분 일정을 마쳤다.

글 · 유한준 편집위원

실록...언론 · 언론인의 길 ‘그때 그 현장 못다한 이야기’ 5집 출간

11월 17일 출판기념회

대한언론인회는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제5집을 출판하고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은 퇴직 언론인들이 재직 중에 겪은 보람과 아쉬움 등 생생한 증언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이번 5집엔 본회 회우 28명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 집필에 참여한 회우는 1집 58명, 2집 42명, 3집 37명, 4집 30명, 5집 28명, 모두 195명이다.

‘못다한 이야기’ 5집 필자와 제목

- *고재혁(한국신문 최초 ‘國花 무궁화 사랑’ 특집)
- *권도호(잊지 못할 ‘수제비 한 그릇’의 보람)
- *김명식(정전위 본회의장서 낭독 된 ‘내 기사’)
- *김상준(‘KBS한국어 30년’의 애환)
- *김선옥(나를 키운 ‘라디오드라마 황금시대’)
- *김영길(탄허 스님의 ‘통일예언’ 떠올리며)



- *김준길(‘大字報’ ‘새마을’... 悔恨과 回憶)
- *김한길(박정희·김대중 뜨거웠던 大選遊說 현장)
- *동문성(오리무중 ‘해경함 863정’)
- *문인수(‘무인도 30년’... 어느 일본 징용병의 투항)
- *박연호(‘언론사 통폐합’ 그때 그 현장)
- *박우정(모두 놀란 ‘MBC 갯벌 개표 예측방송’)
- *백승대(10·26 현장 ‘그때 그 사람’)
- *손주환(‘언론자유 수호’ 불을 댕기다)
- *오일룡(스포츠 ‘명품 인터뷰’와 해프닝)
- *유자호(바웬사와의 만남)
- *이근량(70년대 ‘서부개척시대’ 해외특파원)
- *이원창(소련 전투기의 KAL기 요격만행 교훈)
- *이인원(장안의 화제 생방송 ‘심야토론’)
- *장 옥(서슬 퍼렇던 ‘전두환 장군’과의 만남)
- *전영우(아나운서 30년 대학교수 30년)
- *조천용(‘군인들 고대 난입’ 곤봉세례 취재)
- *조희곤(‘청와대 칼국수 오찬’에 길이 막혀)
- *지용우(‘지용우 時評’에 얽힌 夜話)
- *최금녀(나의 광화문 시절)
- *최병요(산업현장에서 경제성장 지켜보다)
- *한중광(‘그 친구 도청해요’)
- *홍인근(‘빛바랜 취재 수첩’에서)

신문 방송 통신사에서 1950년대부터 활약한 언론인 28명이 이번 제 5집에 글을 썼다. 경력으로는 61년 전 1954년 방송계에 발을 들여 놓았던 전영우 아나운서를 필두로 1960년대 초반에 기자생활을 시작하여 반세기를 넘긴 손주환, 홍인근, 지용우 같은 분들이 언론 역사의 여러 장면을 담았다. 앞서 네 차례 출간된 책에 이미 수록되었어야 할 인물들이 회고하는 글이 책의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못 다한 이야기’의 소재는 다양하다. 가난했던 농촌지역에 따뜻한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 망망대해 바다의 원양어선에서 위험을 무릅쓴 사진 촬영, 해외 특파원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무대는 넓고 등장인물도 다양하다. 사건을 인지하여 경쟁사 모르게 취재에 성공하기까지 긴박했던 순간이 있고, 취재과정에 겪었던 애로와 성공담이 펼쳐진다.

수록된 글은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네 부류의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기자정신이다. 기자협회 회장 시절 손주환 기자가 겪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1971년에 언론자유수호선언을 주도하면서 권력의 탄압에 맞서 언론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면서 개인적인 희생과 아픔을 겪은 끝에 기자협회 회장직을 강제로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인원의 ‘심야토론’은 1987년 10월 17일 첫 방송을 시작하여 4년여 사회자로 일한 경험에서 민주화로 이행되는 시기에 방송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들려준다. 논설위원 16년의 기록을 세운 지용우위원이

歷史의 증언 시대상 반영

‘그때 그 현장 못다한 이야기’ 5집 의미



정진석

·본회 명예회우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불의를 고발하고, 비정(批政)을 꼬집었으며, 이념의 오염을 경고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쏟았다고 자부하는 것도 언론자유와 관련이 있다.

둘째는

공산권 취재의 애로다. 중국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던 문화혁명은 중국 관련 책과 외신보도를 통해서 사태를 파악했다.

김준길 기자의 ‘대자보’는 일반 대중이 당 간부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취재가 아니라 ‘연구’의 결과로 밝혀야 했다. 구 소련 전투기의 KAL기 요격 사건(이원창)은 공산권 취재의 전형적인 애로에 해당한다. KAL이란 로고가 선명한 민간 여객기를 겨냥, 미사일을 2기나 발사하여 269명 탑승객 전원을 숨지게 한 구 소련군의 끔찍한 행위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지만 수교 전이었으니 현지 취재는 불가능했다.

러시아 무르만스크에 KAL기가 불시착한 사건 취재도 어려움이 따랐다. 폴란드

의 바웬사는 아직 연금 상태였다. 그러나 유자호 기자가 단독회견에 성공하여 KBS로 방영되자 AFP통신은 서울발로 이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오늘날은 북한을 제외한 구 공산권 모든 국가들과 수교가 이루어져 일반인들의 여행도 자유로워지고 취재의 어려움은 해소되었다. 하지만 언론인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장벽을 넘어가거나 들려오는 정보를 근거로 취재했던 시절도 있었다.

셋째는 취재, 송고, 제작의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다. 요즈음은 어느 곳에서건 송고방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렵사리 취재한 기사를 송고하려면 가로놓인 여러 장벽을 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 나온 전자제품을 먼저 입수 활용하여 기사를 앞지를 수 있었던 경험담도 흥미가 있다. 1997년 제 15대 대통령선거 개표 예측방송 실시도 신경을 써야 했다. 이제는 기사와 사진의 송고는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기술발전이 알 권리와 언론자유 확대를 가져온 것이다. 누구나 1인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넷째로 취재 비화와 위험을 무릅쓴 특종 이야기. 1965년 한일회담 반대 데모 취재 도중에 진압 군인들의 구타로 입은 심한 부상, 어업선단을 따라 북태평양 알류산열도 일대 취재의 위험한 경험, 정주영 정계진출 비화도 이 부류에 속한다. 취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KBS 아나운서들의 우리말 다듬기는 언론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한 노력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동안 ‘못다 한 이야기’ 출판에 이번 5집 필자를 포함 모두 195명의 퇴직 회원들이 글을 썼다. 우리 사회에 이처럼 많은 필진이 동원된 사업은 없을 것이다. 문인들의 문학전집에는 이보다 많은 작품이 수록되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 기자의 경험담을 담은 책은 대한언론인회의 이 책이 필자 동원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도 글을 쓸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대한언론인회의 ‘못다한 이야기’ 시리즈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4]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記者들 ‘史官정신’ 살아있나

사상 처음으로 기자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다. 작가나 시인이 아닌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을 쓴 윈스턴 처칠과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 버트런드 러셀 등이 있으나 언론인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스웨덴 한림원이 기사와 논설도 문학의 범주에 넣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15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1948년 5월 우크라이나의 이바노프란킵스크에서 부부 교사인 우크라이나인 어머니와 벨라루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태어날 당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소련의 일부였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호모 소비에티쿠스(homo sovietikus)’ 즉 ‘소비에트적 인간’이라고 부른다. 공산주의 제도는 무너졌어도 그 공간에서 살던 사람들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사고방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수백 명 인터뷰 통해 시대상 그려

알렉시예비치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고향인 벨라루스로 이주했고, 고르바초프의 대담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개혁 개방)와 소비에트 연방 해체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독립했다. 알렉시예비치는 지역신문사와 문학 잡지 기자로 일하면서 단편소설과 에세이, 보도 등 다양한 장르에서 목소리를 내었다. 그녀가 선택한 장르는 독특한데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 시대의 자화상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다큐멘터리 소설’이나 ‘서민 목소리’로 불린다. 1985년에 출간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소련 여성들을 인터뷰한 것이다. 이 책이 그들의 아픔과 고뇌에 주목했다는 사실 때문에 알렉시예비치는 반(反) 소련적 정서를 가진 반체제 인사라는 평을 받았다. 대표작 ‘체르노빌의 목소리:미래의 연대기’(1997년)는 핵 누출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마치 핵전쟁 이후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벨라루스는 초대 대통령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1994년 이후 21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데 올해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나라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장기집권을 비판하다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서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다. 2012년에 귀국해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의 책은 한국어를 비롯한 35개 언어로 번역됐다.

세계 작가 연맹인 국제 펜은 언론인을 작가의 범주에 넣어왔다. PEN의 P는 Poet(시인)과 Playwriter(극작가),



유자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노벨문학상 알렉시예비치의 교훈
확인 또 확인해 ‘사실’대로 전해야

E는 Essayist(수필가)와 Editor(편집자), N은 Nobelist(소설가)를 뜻하는데 이 가운데 E가 언론인을 포괄한다. 그래서 펜의 가장 큰 관심은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다.

알렉시예비치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으며 우리 언론을 생각했다. 최근 방송기자클럽에서 전직 회장들을 초청한 자리가 있었다. 현 방송사의 보도본부장이 선배 보도본부장에게 하는 말. “지금 저의 권능이 선배님 때의 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선배는 “그때는 노조도 없었고…”하며 말을 흐렸다.

게이트 키퍼 기능 실종 가장 큰 문제

현 보도본부장이 토로한 고충은 게이트 키퍼 기능의 실종으로 들렸다. 게이트 키퍼가 실종된 대표적 사례로 최근의 ‘이승만 일본 망명 요청 설’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6·25 65주년을 앞두고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것인데 “전쟁 발발 사흘 뒤 이승만 정부가 일본의 지방 정부에 망명을 타진했다”는 내용이였다. 이 기사는 조작 보도로 각계의 질타를 받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의 조치했다. 이 기사는 게이트 키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라면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기사였다. 만일 데스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기자 선에서 보도가 이뤄질 수 있다면 이는 가장 위험하다.

알렉시예비치가 수백 명을 인터뷰한 것은 확인을 위해서였다. 확인 또 확인만이 진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념 전쟁의 시대이다.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또다시 심한 좌우 대결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좌우의 개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특한데, 당초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랑스의 급진 자코뱅 당과 온건 지롱드 당을 구분하기 위해 쓰인 말이다. 급진파가 의회 왼쪽에, 온건파가 오른쪽에 앉으면서 좌파(gauche), 우파(droite)라는 말이 나왔고, 이것이 나중에 보수주의자들을 우파, 진보주의자들을 좌파로 부르게 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방 공간과 6·25를 겪으며 좌파라고 하면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그래서 지금도 좌파라고 하면 여야 할 것 없이 질책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보수, 진보가 타당한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에서의 표현부터 잡아가야 극한 대립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보도국 분위기는 참으로 곤혹스러울 것이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지지하면 웬지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비치지 않을까, 또는 반대하면

사상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고민하는 기자는 없을까? 자기의 소신과는 관계없이 보도국 분위기에 좌우되는 기자는 없을까?

기자의 가장 큰 무기는 진실 추구

여기에서 나는 다시 알렉시예비치의 기록 정신을 환기하고자 한다. 옛날에는 사관들이 사초를 기록했다. 사초란 역사 기록을 위해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모여 실록이 된다. 성품이 강직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사관으로 기용했고 이들은 진실 앞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세계 유수의 기록물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기자란 1차 사료인 사초를 쓰는 자라고 생각한다. 사관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더도 덜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 쓰는 것. 이것이 생명이다. 기자가 이 사관 정신에 입각할 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기자에게 요구하는 것. 기자의 가장 큰 덕목은 사실의 기록이자 전달이기 때문이다. 진실 추구만이 기자들의 가장 큰 무기이며 그들을 고민에서 구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KBS의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인류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의 순기능을 제대로 보여준 일대 장거였다. 온 국민을 울게 한 감동의 다큐멘터리였다. 이런 것이 바로 방송이 진실을 들여다볼 때 발휘하는 힘이다. 진실을 보고, 보여줄 줄 아는 용기를 가졌던 당시 이원홍 사장과 방송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

등록 인터넷 신문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5,877개 중 43.8%가 홈페이지가 아예 없거나 최근 1년간 단 1건의 기사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진흥재단이 지난 6월 8일~8월 30일 실시한 ‘인터넷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 점검 결과 인터넷신문 두 개 중 하나 꼴로 유명무실한 ‘유령 사이트’인 셈이다.

인터넷신문의 법적 준수 사항을 제대로 시행하는 경우는 더 드물었다. 신문법 시행령 상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 단위 신규 기자 게재’와 ‘자체 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홈페이지는 39.7%(2,333개)에 불과했다.

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 사항 8개 항목 모두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는 10.9%(639개)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8개 항목은 명칭·등록 번호·등록 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 연월일이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 등록된 249개 매체 중 73.9%(184

언론중재위, 인터넷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허위기사·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삭제 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허위보도를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 해당 게시글을 관리하는 사업자 등에 기사·댓글·퍼온글 등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기사 삭제를 청구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이고 개인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가 명백하거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KBS 사장후보에 고

KBS 신임사장후보에 고대영(60) KBS비즈니스 사장이 선정됐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사장후보 5명에 대한 면접심사 뒤 투표를 통해 고 후보를 신임사장후보로 결정했다. 재직이사 11명 가운데 7명이 고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이사회는 여당추천 이사 7명, 야당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1985년 KBS 공채 11기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 기자, 모스크바 특파원,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 KBS비즈니스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고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제정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한편 고 후보에 반대하는 KBS노동조합과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총파업 등 모

2015 한국편집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박문홍)는 올해 제21회 한국편집상을 발표했다.

대상은 조선일보 박미정 기자의 유럽난민 사태를 다룬 ‘세살아이 받아준 곳, 천국 밖에 없었다’가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한국일보 이직 기자의 ‘간통죄, 철창서 나오다’가, 우수상엔 경향신문 장용석 기자 ‘문·사·

저널리즘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절반이 ‘유령사이트’

개)가 최근 1년 간 한 건 이상의 신규 기사를 서비스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요 준수 사항인 ‘기사 배열 기본 방침 및 책임자 공개 의무’(신문법 제 10조)는 6%만이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록 인터넷신문이 약 43%에 달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된다”며 “등록 요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10월 1일 종료됨에 따라, 문체부는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취합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개정된 제도를 공표할 계획이다.

기사 삭제청구권 추진

침해하여 이를 방지하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언론중재위는 하급심 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경우와 같이 기존 보도 내용이 명백하게 틀릴 때에도 위법한 온라인 인격권 침해로 봤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웹사이트 게시 중단, 기사의 수정·보완, 데이터베이스(DB)에서 기사 삭제 등을 꼽았다.

언론중재위에 기사삭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안 후 1년으로 제한했다.

대영씨...청문회 관심

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혀 노사갈 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야권에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고 후보의 임명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KBS이사회 사무국은 후보자 공모에 14명이 지원했다고 지난 10월 14일 밝혔으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KBS노조 등에 따르면 조대현 KBS 사장을 비롯해 강동순 전 KBS 감사, 고대영 KBS비즈니스 사장,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김찬호 KBS PD, 안동수 전 KBS 부사장, 이몽룡 전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이정봉 전 KBS비즈니스 사장, 전진국 KBS아트비전 사장, 조맹기 서강대 교수,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 수상작 발표

철... 길을 잃다’, 부산일보 권상국 기자 ‘추억 말아 한 줄 행복 말아 두 줄’, 경인일보 어강비 기자 ‘섬, 씹’, 서울신문 김휘만 기자 ‘행복했어요... 우리도 두리도’, 중앙일보 임윤규 기자 ‘1100만, 13월의 울화통’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린다.

‘歴史전쟁’ 둘러싼 해석 붕괴

대한민국은 역사전쟁중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육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국내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과 미·일 방위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한·일 역사전쟁에 박근혜대통령이 배수의 진을 치고 선봉에서서 독려하는 정국이 되었다. 참모와 장수들이 빈약하지만 명분과 목표가 분명하니 박대통령의 역사전쟁은 승산이 높다. 10월 12일 교육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후 신문들은 3주간 검정 국사교과서의 오류·국정화 반대 여론·집단지위권을 둘러싼 한일간 역사쟁점을 다각적으로 해석하고 해석하는 특집으로 도배했다. 탐사보도의 모범으로 남을 특집도 많았으나 일부 신문은 YS~MB정부 20년 운동권의 좌편향 이념 교육청산과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 억제에 대한 역사전쟁을 이념·세대·

정파·지역 갈등으로 변질시키는 패거리·정파 저널리즘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카쓰라 태프트 밀약에 버금가는 아베의 집단 자위권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한·일 역사전쟁에 대한 일부 신문의 재조명은 국민을 각성 통합시키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일본에 경도된 미국의 극동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환기시킨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 “세밀하게 계획된 편파적 경향”(10.14)과 조선일보 사설 “한민국 국방장관, ‘자위대의 북 진입 발언’ 왜 덮으려 했는가”(10.22)는 가장 돋보이는 시의 적절한 에디토리얼이었다. 연합 뉴스도 “일 자위대 진출 관련 연일 말 바꾸는 국방부”(10.23)라는 해설 기사로 국방부의 대일 접촉을 비판했다.

10월 21일 롯데호텔에서 베풀어진 한일 친선 모임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는 우호적인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박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올바른 역사 인식과 선린우호 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도 “함께 손잡고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를 구축해 나가자”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10.22)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20일 한국에서 열렸던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북한에 상륙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유사시 북한 점령 가능성도 암시한 중대 발언이다. 한 세기 전 한반도를 발판으로 대륙 침략을 구상한 정한론(征韓論)을 폈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묘를 총리 취임 직후 참배했던 아베의 집단자위권이 한반도에 미칠 우려가 현실화 한 것을 한국신문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일본 방위상

신문시평



박석홍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 전 언론법학회 감사

‘일본군 한반도 진입 불가’ 한목소리
‘국정교과서’ 설득력 있는 방안 촉구

의 문제 발언에 대해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와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조약문을 근거로 반박하지 않은 것을 추궁하는 신문 사설이 쏟아졌다. 북한 급변 사태시 주민·영토 관할권은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와 동서독 분단기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분단은 잠정적인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국 분단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이 한국 분단 고착화 의사가 없다면 북한에 재상륙할 필요가 없다. 한민족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분단 장기화 요인이 될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은 꼭 막아야 한다고 국제정치 학자들은 신문 기명 칼럼으로 주장했다.

일본군 한반도 상륙 분단 고착화 우려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일본 국방상의 돌출 발언 직후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도 22일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한·미 간 논의가 있었음도 시사했다. 문제는 국방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구매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부풀리고 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숨긴데 이어 나카타니의 문제발언을 반박하지 않았고 언론 브리핑에서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신문칼럼들은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 속셈을 즉각 반박하지 않은 국방장관과 동석한 보좌진들의 “역사의 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개정 미·일 방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아베 집단자위권 등에 관련한 지도층의 자주국방·국익 보전 인식 결여가 국방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신문 사설들은 거론했다. 아베의 한일관계사 왜곡 발언이후 언론인·학자·기업인·종교인 등 파워엘리트가 일본과의 결속을 강조하며 국익과 자주 국방의식이 결여된 혼미한 주장을 해왔다고 신문 칼럼들은 지적했다.

국사교육 논쟁 정쟁 도구 아니다

박대통령은 10월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물려줘야 한다”며 국사교육 개선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사 교육을 둘러싼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과 학생들을 나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국사교육 개선을 3번이나 천명하고 국사편찬위원회 회위원장 교육부장관

청와대 교육 문화 수석비서 등을 계속 경질했으나 국사교과서 개편이나 국가 정체성 확립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2014년 4월 박근혜정부가 검정 보급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구폭동’ ‘제주 4·3 사태’를 ‘10월 항쟁’ ‘제주 4·3 항쟁’으로 기술하라는 YS정부의 1994년 제6차 교육과정 준거안으로 시작된 좌편향 교과서의 결정판이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후 국사교육 개선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YS~MB정부 20년에 공교육을 장악한 좌편향 자학 국사 교과서의 전면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는 진단에는 대체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문화 개혁이 YS~MB 20년 정체와 혼란을 극복하는 처방이라고 긍정 평가하며 국사교육 전면개편을 지지 촉구하는 신문기명칼럼과 인터뷰기사도 많았다. 국사교육 개혁을 모색한 동아·조선 탐사보도는 검정 국사 교과서의 오류와 원인부터 공개하고 설득력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검정 국사교과서 오류와 구조적인 문제를 백서로 공개해서 개정 전 검정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도 바르게 가르치고 과거에 잘못 배운 역사지식도 수정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신문 사설들은 권고했다. 국정화 작업에 앞서 국사 교육과정·국사교과서 지침서·검정작업을 담당했던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먼저 석고대죄해야 하며 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국사교과서를 386세대 운동권의 민중사관과 사회주의 좌편향 시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 편수체제 정비·국학기관 인사 개편·학계 원로가 참여한 교과서 집필 등 각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

회우들이 펴낸 신간

홍원기 명예회장 '신문산업 어제와 오늘'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이 자신의 신문인생 60년을 회고하며 쓴 책 '신문산업 어제와 오늘'을 펴냈다. 관훈클럽신영기금의 저술지원을 받아 출판한 이 책은 신문산업이 왜 위기에 직면했는지를 현장감 있게 심층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1954년 6월 9일 한국일보 창간과 더불어 신문배달을 시작으로 편집국 교정부 기자, 지방부 기자, 사회부 기자, 사회부 차장 등 신문기자 14년, 광고부장, 판매국장, 판매본부장, 상무이사, 감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일보에서만 반세기 넘게 근무했다.



한국일보 생활을 마무리 하고 나온 뒤에도 '신문마케팅연구소'를 개설, 신문판매 관련 연구와 논문을 발표했고 서일대학에서 출판정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재실무와 신문마케팅, 그리고 직업윤리를 강의했다. 2002년 무료신문 '메트로' 창간에 참여, 무료신문시장 개척에 뛰어든 뒤 2006년 'CBS노컷뉴스' 창간발행인으로 이어진 저자의 신문인생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일들이 적나라하게 소개되었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의 추천사와 제재형 한국일보사우회 회장(대한언론인회 고문), 송효빈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추천사를 곁들인 이 책은 먼저 신문산업이 지금과 같은 과당경쟁에서 활로를 모색하려면 '보는 신문에서 팔리는 신문'으로의 전환을 위해 신문종사원 모두가 세일즈맨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편집국장도 신문판매와 광고를 알아야하고 본사 제작진과 일선 판매망이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로를 모색해야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서술해 누구나 가볍게 읽어볼 만한 책이다. 책 후반부는 6·25한국전쟁당시 폭격으로 부모를 잃고 두 여동생과 졸지에 고아가 된 뒤 갖은 고생을 하며 역경을 헤쳐나간 회고록으로 엮여져 있다.

변함없는 견습기자 정신으로 신문인생을 살면서 역경을 딛고 일어난 저자의 인생역정은 한편의 휴먼 드라마로 심금을 울린다.

〈태봉출판사·21,000원〉

전영우 원로회우 '바른 예절 좋은 화법'

전영우 대한언론인회 원로회우(동우회 부회장)가 '바른 예절 좋은 화법—착한 인성의 품격'을 펴냈다.

오늘 우리 가정·학교·사회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전에 없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절'이요 '화법'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나무로 치면 뿌리와 줄기가 인성이요, 가지와 잎과 꽃이 예절 및 화법인 것이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남에게 공손하고 남을 배려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보통 막말에다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한다. 이 현상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글로벌 에티켓은 그 정신적 근원을 캐면 인간 개개인이 품위와 자존심을 높이고자 하는 변함없는 현장 적응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동시에 에티켓은 바로 남에 대한 친절과 배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출발하여 가정 예절, 공동 사회 인간관계, 직장예절, 나아가 여러 정황과 장면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이 같은 내용을 이 책이 담고 있다.

저자는 글로벌 시대 예절 텍스트의 원류를 유교 경전의 '예기'와 엘리너 루스벨트의 '에티켓 상식'에서 찾아 예절의 동서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 책 구성은 주로 엘리너 루스벨트의 '에티켓 상식' 중에서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요 부분을 발췌 번역 편찬한 내용이지만, 이미 있어온 우리 예의범절과 에티켓 대강을 기초 개념으로 정리한, 번역과 편찬의 성격을 띤다.

〈민지사·13,000원〉



이규섭 편집위원 '자연아 놀자'

이규섭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이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책을 펴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생생 생태기행 '자연아 놀자'이다. 나이에 구애 받지 않고 어린이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간 저자의 동심이 순도 높은 아침이슬처럼 신선하다.

“들꽃은 독특한 빛깔과 향기로 저마다 개성을 꽃피웁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개성 넘치는 나만의 색깔, 나만의 향기로 세상의 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며 저술의도를 밝혔는데 이는 칠순의 저자가 자신의 손자에게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다.

'톡톡 클릭', '생각 쑥쑥' 등 상자 글을 통해 가시고기의 자식사랑, '나 왜숨다리는 에텔바이스가 아니에요' '진달래와 철쭉 햇갈려요' 등 동식물 이야기엔 삶의 체험이 녹아 있다.

전래동요로 나무 이름 외우는 재미도 쏠쏠하다.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꽃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입맞추자 쪽나무, 바람 솔솔 솔나무, 방귀 끼는 뽕나무, 십리 절반 오리나무, 빠르기도 화살나무, 자장 자장 자작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흐르륵 흐르륵 국수나무'. 외우기 참 쉽죠. “뽕나무가 방구를 뽕~ 꺾어, 대나무가 대개놈 하나까, 참나무가 참아라 그러더래.” 이야기로 엮은 나무이야기도 구수하다.

언론에 30년 몸담았던 저자는 현장 취재를 중심으로 꼭 가봐야 할 우리나라 생태체험 관광명소 37곳의 동식물 서식 분포, 집중 관찰 대상 등 생생한 정보를 담았다. 시원한 사진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썼다. 저자는 “성장기 어린이들이 생태활동을 통해 감성과 지능을 키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웠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했는데 어른들에게도 그냥 지나쳐 왔던 자연에 대해 전과 다른 시선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틈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출판 밥북·15,000원〉

박연호 회우(전 국민일보 문화부장·논설위원)記



말본새는 인격의 표현

점잖은 사람인지와 아닌지를 분별하는 첫 번째 도구는 그 사람의 말본새다. 그래서 말은 인격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요즘의 중장년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말의 표현방식이다. 같은 중장년끼리는 별 문제없이 다정다감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젊은 층과 청소년을 만나게 되면 매우 곤혹스러워진다.

“아버님.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신발 하나 살까 해서……”

“아, 그러세요? 신발 코너는 저쪽에 있으세요.”

“으응? 저쪽에 계~세~요~? 누~가~요~?”

이쯤 되면 대형매장을 찾아가 중년신사가 젊고 예의 바른 안내원과 나누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말의 엇박자가 심하다. 신발 파는 곳은 저쪽이라는데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나이 들면서 귀에 거슬리는 말투는 이것뿐이 아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수수료가 나오세요.”, 관광안내원의 “저기 보이시는 남산은…”, 고궁안내원의 “줄을 서실 게요.” 등은 기분을 상하

게 할 정도다. 심지어 방송의 뉴스 앵커조차 “지금 피의자께서 검찰청으로 들어가십니다.”라고 중계한다. 한심하다 못해 안쓰러울 지경이다.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이든 사람의 탄식이다.

삼가야 할 일탈 표현

꼭 고상하고 점잖은 말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욕이나 다른 없는 말을 삼가는 것은 기본이고 사리에 맞는 말, 상황에 적합한 말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노력해야 한다.

음식점에 가서 젊은 여종업원에게 ‘야! 언니야!’, ‘이봐! 이모! 여기 깎두

나이듦의 품위와 말투

생활칼럼



최병요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기 줌' 하며 고함치는 것은 참 무지스럽고 역겹다.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무리일 지언정 나이다운 언행이어야 대접을 받는다. 그냥 '종업원~' 하든지 '도우미 양~'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면 단번에 달려와 준다. 당사자들과 주위사람이 존경스러운 눈초리를 보낸다.

요즘은 약간의 성적 표현도 죄악시하는 시대다. 어린 손녀 또래 계집아이에게 ‘야, 너 크면 미스 코리아 되겠다.’라고 하면 예쁘다는 칭찬으로 듣는 게 아니라 염연한 성적본심의 발로로 매김 당한다. 남성이 여성에게 나이 불문하고 그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제 삼가야

한다.

혹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표현 또는 성폭력언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앞이마 벗어진 남자에게 ‘정력이 좋다는 증거’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언행이다. 여성의 외모, 남성의 신체부위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로 삼가는 것이 교양인이 지켜야 할 품위다.

고상한 표현은 세월의 소리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말의 독소다. 특히 빈정거리는 말투는 독소의 대표적인 예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라는 속담이 생긴 연유다. 말의 독소는 가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말이다. 진정한 사과가 배어있는 말로서 용서를 구해야 치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에서 알고 있다.

또 어른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다소 일그러진 언어생활을 무작정 나쁘

13면으로 이어집니다.

백천계곡-협곡열차 풍광에 젖었다

대한언론인회 가을철 문화탐방

글 · 정운종 상임이사
사진 · 강두모 회우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0월 22일 한창 단풍이 절정인 경북 봉화 백천계곡과 철암~분천 역 사이의 협곡을 지나 무궁화호 열차를 타는 등 가을철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다. 회원 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봄철 문화탐방에 이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실시됐다.

아름여행사가 행사를 대행해준 이번 가을 철 문화탐방 첫 코스는 봉화 백천계곡 트레킹,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이 가을 정취를 마음껏 뽐내며 일행을 반긴다. 계곡 입구엔 대한불교 불승종의 총본산인 현불사가 오랜 종단 분규를 수습하고 방문객을 맞고 있다.

작년 까지만 해도 신도이외의 일반방문객을 기피했던 현불사는 설송(雪松) 스님(1918~2009)이 1962년 창종, 1980년에 세워진 사찰이다. 설송 스님은 한때 예언가로서도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서는 차(車)를 조심하라고 해 자동차도 바꾸면서 조심하였지만 이 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인 차지철이었음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크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1983년 이후 이곳을 찾은 대표적인 정치인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더욱 유명해 진 절이다.

이 절을 옆에 끼고 도로로 20여분 올라가면 백천계곡(편도 3.4킬로미터) 입구가 나온다. 백천계곡은 태백산에서 발원한 옥계수가 해발 650m 이상의 높은 고원을 16km에 걸쳐 흐르면서 만들어 낸 계곡으로 연화봉(1,052m), 청옥산(1,276m), 쪼록바위봉(1,088m) 등의 높은 산에 싸여있어 계곡의 물이 맑고 수온이 낮아 희귀한 열목어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철암역엔 오후 3시 15분 영동선 무궁화호를 타고 협곡을 달려 보려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단풍 시즌이라 매일 수 백 명 씩 붐빈다는 철암역 주변은 온통 단풍촌 분위기가 여전했다.

V는 협곡을 뜻하는 Valley의 약자



백천계곡 입구 현불사 앞에서 기념촬영.



철암역에서 출발한 V트레인 종착역인 분천역앞에서.

로 자동차로도 갈 수 없는 백두대간의 협곡 즉 분천역~철암역까지 (27.3Km)를 약 40분간 무궁화열차로 달리며 백두대간의 비경을 여유롭게 감상 할 수 있어 좋았지만 협곡에 떨어진 시선을 때

자마자 내리자니 좀 아쉬웠다.

귀로에 들른 한식당에서 출출해진 배를 채운 올갱이 해장국 맛도 일미였고 김은구 회장의 힘찬 건배제의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기 자신을 위

하여’)는 이날 행사의 의미를 한층 증폭시킨 느낌. 평일이어서인지 차도 잘 빠지고 날씨 또한 쾌청하니 자화자찬 같지만 박자한번 잘 맞는 하루였다 는 생각이 든다. [4]

12면에서 이어집니다.

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다. 지금의 어른들도 청소년 시기에는 일탈된 언어유희에 빠져본 기억을 모두 갖고 있지 않은가. 지나친 축약 언어가 요즘의 대세이지만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은 언어 형태다. 곧 사라질 유행에 불과하므로 굳이 따라하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니까 경우

에 합당한 말 한마디는 천 냥보다 값지다는 말이다. 말을 할 때는 시기와 장소를 가려 대화상대방의 감정을 철저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잠언이다. 성서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라고 지혜로운 언어생활을 언급하고 있다. 나이 들어 신체의 운동능력은 다소 저하되고 있지만 지적능력의 표현인 언행은 오히려 고상해지는 게 세월의 순리다. 우리는 듣기에 거북한 농담을 재치인 줄 혼동하고 있으며 농담과 음담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곡을 찌르는 재치 또는 유머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해주지만 출신 고향과 학력, 성씨에 대한 상식이하의 비유는 자칫 망신살로 돌아온다.

병영의 언어문화가 충성심으로

언어문화는 그 나라의 품격과 직결된다.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미국 사람들을 보면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입에 달고 산다. 영국 사람들의 조용조용한 말투, 일본 사람들의 남을 배려한

말투는 꼭 본받을 만하다.

다 아는 일이지만 요즘의 병영에서는 존댓말을 권장하면서 제대로들 사용하고 있다. 전역하면 사회에 복귀해 각 분야에서 중추역할을 맡게 될 이들의 언어습관은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기대한다.

얼마 전 남북의 대치상태가 극에 달했을 때 서슴지 않고 전역을 연기한 일부 장병들의 충성심은 바로 그러한 올바른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다. [4]

溫故知新

백두산 등정의 추억

평생토록 명산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정작 정상까지 오른 적이 드물었다. 산행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답사를 하러 찾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명산들은 모두가 뜻 깊은 역사의 현장이다. 경관이 빼어날 뿐 아니라 봉우리와 골짜기마다 갖가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유서 깊은 고찰(古刹)을 품은 명산도 있고, 그 언저리에 역사를 바꾼 전쟁터가 펼쳐진 산도 있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날 때마다 관광객의 눈으로 경치를 보지 않고 순례자의 눈으로 역사를 읽으려고 애쓴다.

백두산(白頭山)과 금강산(金剛山)은 우리나라 명산 중의 명산이다. 젊은 시절부터 가보고 싶었지만 중국과는 국교가 없었고, 북한과도 왕래가 없었기에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백두산을 처음 찾은 것이 20년 전. 광복 50주년이던 1995년 7월이었는데, 그해에 내 나이도 50세였다. 그때 어느 대학원 사학과 답사반과 동행하여 15일간 고구려와 발해 유적을 찾아보는 기회에 백두산에도 올랐던 것이다. 그렇게 겨레의 어머니산 백두산에 올라보고, 또 2002년 봄에는 금강산도 찾아가봤으니 이는 내 한 생(生)의 행운이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광복동이인 이 사람이 백두산을 더욱 그리워한 까닭은 1945년 8·15해방의 감격과 환희도 잠깐, 그동안 외세에 의해 국토가 양단된 채 광복의 기쁨을 씨줄 삼고 분단의 아픔을 날줄 삼아 현대사 반세기를 교직(交織)해왔기 때문이었다. 그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통일의 원망(願望)이 우리네 가슴마다 얼마나 뜨거운 응어리로 맺혀 있었던가.

그토록 그리던 백두산이 거기에 있었다. 백두산과 천지(天池)는 장엄한 대자연의 일대 서사시였다. 무엇보다도 그날 나는 운이 좋았다. 열 번 올라도 한두 차례밖에 백두산 정상부와 천지의 온전한 장관을 볼 수 없는데, 하루에 잇달아 두 차례나 올라서 두 번 모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고 광장(廣壯)한 백두산과 천지의 황홀경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해 7월 4일 중국 쪽 백두산 산행의 들머리 이도백하(二道白河)에 도착, 호텔에 여장을 풀고 몸부터 씻었다. 심양(瀋陽)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에 입국한 뒤 3일간 답사에 강행군을 한 데다 밤새 기차여행에 시달렸으므로 온몸이 땀에 젖어 풀이 말아 아니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어머니 산의 품에 안길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토록 열망하던 백두산 산행을 시작했다. 산문(山門)을 들어서자마자 먼발치로 백두산 영봉들이 눈에 났다. 가슴이 뭉클했다. 중국 땅을 거쳐서 찾아온 못난 자식이지만 어머니의 무한한 자애로 용서하며 반겨주는 듯했다.

백두산 정상부는 한여름의 멸절하게 맑은 날이라도 갑자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안개와 구름이 사방에서 자욱하게 몰려오고, 비바람 모래바람 우박이 사납게 몰아치는 등 기상상태가 예측불허로 천변만화, 변화무상하다. 가까스로 정상부에 올라도 천지 일대의 온전하고 맑은 장관을 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풍자와 해학으로 35년간 주유천하한 방랑사인 김삿갓도 ‘금강산은 여러 번 올랐고 묘향산도 두 번이나 올랐지만 백두산은 멀리서만 보았지 단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다’고 탄식했는지 모른다.

산문을 지나면 곧 악화(嶽樺)삼거리. 여기서 길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왼쪽 길은 천문봉(2,650m)으로 오르는 자동차길이다. 지프로 흑풍구(黑風口)를 지나 천문봉까지 오르는 데는 20분도 안 걸렸다. 차에서 내려 천문봉으로 올라가 천지를 둘러보는 데도 10분 정도면 충분했다. 이래서야 백두산에 올랐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악화삼거리까지 되돌아 내려온 다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백두산



황원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산행에 나섰다.

악화삼거리에서 오른쪽 천지길(장백폭포길)을 택해 걸어서 오르기 시작했다. 곧 가파른 너털길에 들어섰다. 왼쪽으로 장백폭포에서 쏟아지는 송화강 원류 이도백하를 내려다보면서 힘겹게 올랐다. 길은 오른쪽으로 천인단애의 바위 절벽을 따라서 실낱같이 이어진 아슬아슬한 벼랑길이다.

마침내 넓은 천지가 별유천지(別有天地)인 양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졌다. 그런데 천지는 북한과 중국의 비밀협정에 따라 양측 국경선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이에 따라 천지를 둘러싼 2,500m이상 16개의 고봉 중 7개는 북한 측에, 9개는 중국 측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천지 맑은 물을 배부르게 마셨지만 하산하는 마음이 무거운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해 우리 땅을 밟고 백두산을 찾지 못했고, 최고봉인 장군봉 정상에도 오르지 못한 아쉬움이 큰 탓이었다.

그러나 나는 백두산 북쪽 절반과 우리 선조들이 개척한 간도(間道) 땅을 중국영토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현재 중국 측 영토인 장백폭포와 소천지 등에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온 견우와 직녀,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이 서려있지 않은가. 간도는 일제(日帝)가 제멋대로 만주의 철도부설권과 맞바꾼 탓에 중국에 넘어갔으니 그 조약은 당연히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다.

중국이 중국사의 상한선을 천년 이상 끌어올리는 역사개조작업인 단대공정(斷代工程)을 시작한 것은 내가 백두산과 만주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인 1996년부터,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국 변방사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였다. 그런데 나는 만주를 답사하면서 곳곳에서 이미 그 조짐을 보았다.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 안 내판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지방 통치기구였다’느니,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북방의 소수민족’이라느니 하는 헛소리로 도배를 해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최근 중국은 ‘백두산은 창바이산(長白山), 창바이산은 중국산’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까지 빼앗아가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 참으로 속이 터진다. 중국은 ‘장백산공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창바이산 생수와 창바이산 인삼 브랜드를 개발하고, 최근에는 백두산 인근 지역의 학교마다 앞에 창바이산을 붙여 교명까지 바꿨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머릿속에서 백두산을 지워 없애는 대신 창바이산을 주입시키려는 고도의 교활 음흉한 교육방침이다.

중국이 이처럼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둔갑시키려는 저의 역시 동북공정과 마찬가지로 중화패권주의의 발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변국들은 모두 오랑캐라는 오만무례한 중화제국주의 사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사의 영역이 압록강·두만강 이남에 국한된다’느니, ‘한국사의 뿌리는 신라’라느니, ‘고구려는 희미한 추억이고 발해는 말갈족의 역사’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사학자가 있으니 개탄스럽다. 심지어는 ‘고조선과 고구려사를 중국사 한국사 구분하지 말고 요동사로 부르자’는 사람도 있다. 여전히 중화제국주의와 일제 식민사관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지만 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고구려·발해사에 이어 고조선·부여사까지 빼앗기고 나면 우리 역사에 무엇이 남겠는가. 극단적인 국수주의는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국가적 자존심과 민족적 정체성까지 망각해서야 될 일인가. 통렬한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민복과 부국강병을 외면하고, 역사교육을 확대하면 망국의 위기는 언제든 찾아오게 마련이다. [국문]

동아·조선 사우회 친선 바둑대회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태선)와 조선일보 사우회(회장 인보길) 대한언론인회 부회장)간 바둑대회인 ‘광화배 친선 바둑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한성기원에서 열렸으며 양측에서 선수·임원 등 4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퇴직사우들 간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생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창

설된 이 바둑대회는 해마다 양사가 번갈아 주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동아일보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1급과 2~3급, 4급 이하로 나뉘별인 이날 대국에서는 동우회가 16대 13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역대 전적은 동우회 7승 조우회 6승이 됐다.

대국이 끝난 뒤엔 무교동 음식점에서 뒤풀이 회식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한성기원에서 열린 광화배 바둑대회 시상식.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④

저 용량 아스피린 70세 이상은 도움 안돼

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최근 저용량 아스피린이 50대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 이하나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면서 새로운 복용 연령 지침을 발표했다.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10% 이상이 될 때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권고해 왔다. 이번 새 지침은 나이가 60세 이상인 사람은 비록 향후 10년 이내에 심장병 발생위험이 10%가 되더라도 아스피린 복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본인 과 의사 협의로 결

정하도록 했다.

한 전문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심장병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흡연을 지속하고 운동도 잘 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식생활마저 관심을 적게 가지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했다.

지금까지 저용량 아스피린은 매일 복용할 때 심혈관질환은 물론 대장암과 위암, 식도암 등 소화기계 암과 폐암의 발생위험을 낮추고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률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성인의 절반 이상이 매일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데 84%가 심장발작, 66%는 뇌졸중, 18%는 암, 11%는 알츠하이머치매 예방을 위해 복용하고 있다.

아스피린은 장기 복용할 때 위장출혈과 뇌출혈에서 시력장애 등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보고서는 저용량 아스피린은 장기간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했다.

故 정재도 원로회우 '옥관문화훈장' 추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9일 569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고 정재도 원로회우에게 옥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옥관문화훈장이 수여된 고 정재도 선생은 1956년부터 한글학회 사전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전 속에 있는 일본말 잔재 청산과 쓰지 않는 한자어 정리 등을 통해 우리말 사전 편찬에 평생을 바쳤다. 아울러 정부의 교과서 집필위원과



고 정재도 회우

국어심의위 표기 분과위원, 한글맞춤법 분과위원, 방송용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어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 '우리 말글 이야기' (1980), '국어사전 바로잡기' (1999), '우리 말글의 갈 길' (2004) 등 다수의 한글 관련 저서와

1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평생을 우리 말글 연구에 헌신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이번에 등재된 KBS 기록물은 이산가족들이 보낸 신청서와 생방송 테이프, 방송 자료 등 관련 기록물 2만 522건으로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냉전 상황과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겼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인류 공동의 문화사회적 가치, 진정성과 독창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서 선정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7년 처음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동의보감, 5·18 민주화운동과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13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원로에세이 — 어제 오늘 사이

도로명 주소

유성렬 · 전 합동통신 경제부장



나는 요즘도 매일 도서관에 나가 새로운 공부를 한다. 최근에 터득한게 지번주소제도다.

도로명주소라는 새로운 주소제도가 생기면서 이에 따라 근 백년동안 우리에게 친숙했던 지번 주소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껏 써왔던 지번주소체계란 어떤 것인가.

지번(地番)이란 토지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매겨 놓은 땅의 번호이다. 그 땅이 지니고 있는 고유번호이다.

지번은 지역별로 기번(起番)하여 번호를 정하고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순차 설정한다.

그리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인접지의 본번(本番)에 -1, -2 등으로 부번(副番)을 붙인다.

예를 들면 무슨무슨동 10번지 2호의 경우 10번지가 본번이고 2호가 부번이 되는 것이다.

지번제도의 역사는 오래됐다. 즉 고려말 전제(田制)를 개혁하는 과전법(科田法)이 실시되면서 구 토지대장이 없어지고 새로운 토지대장이 지번제도의 시작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모든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①정전(正田) ②속전(續田) ③강등전(降等田) ④강속전(降續田) ⑤가경전(加耕田) ⑥화전(火田)으로 등급을 정하고 20년마다 한 번씩 실시, 그 결과를 양안(量案)에 기록하도록 했다.

그리고 속대전(續大典)의 기록을 보면 천자(天子)토지인 경우 천자제일 천자제가 천자제삼……과 같이 표기했다.

그 후 토지가 분할될 때 지번(地番)에다가 부번(副番)을 붙이는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지번의 문자 표기는 한문숫자인 一, 二, 三이었던 것이 아라비아숫자인 1, 2, 3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토지자체가 자주 분할(分割)함으로써 지번이 뒤엉키고 동(洞)이나 리(里)가 합병함에 따라 중번(重番) 또는 결번(缺番)이 생기는 등 지번표기의 혼잡과 지번형태의 혼용, 결번·중번의 혼재와 같은 현상이 벌어져 지적(地籍)의 불신을 초래했다.

도로명 주소체계는 도로명주소법(법률 제8027호 : 2006. 10. 4 제정)에 의하면 그 목적이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라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이다. 도로명은 폭 8차로 이상을 〇〇대로, 폭 2~7차로는 〇〇로, 로보다 좁은 길을 〇〇길로 표기한다.

다음 건물번호는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표기한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의 거리는 10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건물번호 1과 건물번호 70인 경우 70×10미터=700미터의 거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명이 서울시의 경우 약 2만개이고 전국적으로는 약 30만개나 되어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도로명 주소제도의 발상은 사람들의 생활근거가 옛날에는 토지라는 인식이었었는데 도로명주소는 건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는 도로명주소가 없다)

집 찾기를 쉽게 하기 위하여 지번 주소제도를 폐기하고 도로명 주소제도가 생겼으나 국민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흔히 집을 찾을 때는 ①지하철 몇 호선 어느 역인가를 우선 확인하고 ②그 역의 나가는 출구가 몇 번인가 ③출구 후의 길 방향과 눈에 띄는 건물 랜드마크를 물어보고 ④아파트 단지의 이름과 몇 동 몇 호를 알아 놓은 후 찾아가는 것이다.

도로명을 가지고 집을 찾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주위환경이 급격히 변해 따라가는 방법으로 지번 주소제도를 버리고 새로 도로명 주소제도가 생긴 것인데 아파트 등 주위환경이 급격히 변하여 또 다시 새로운 주소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음에 강구되어야 할 주소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11월 1일 0시 현재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공고를 보면서 또다른 공부를 생각해본다.

김정한 원로회우 별세

김정한 원로 회우가 10월 26일 오전 3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1923년 6월 15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보성전문학교 상학과를 졸업했다.

1946년 독립신문 정경부, 태양신문 사회부 기자, 자유신문 정경부 기사를 거쳐 합동통신 정치부장, 사회부장, 출판국장등을 지냈다. 일본 지지(時事)통신 서울지국장, 한국국제문화협회 편집주간, 대한언론인회 자문위원, 원로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족의 저력’(일역), ‘민족의 섬광’(일역)등의 저서를 남겼다. 대한언론인회는 10월 28일 오후 4시 고인의 빈소에서 추도식을 가졌다. 박진서 회우의 추도사와 제재형 고문의 영생기도문 낭독으로 이어진 이날 추도식에는 본회 김은구 회장을 비롯 유성렬 우경식 송호창 회우와 구 합동통신 동료들이 다수 참석했다.



박진서 회우가 조사를 읽고 있다.

김정한 부장님 영전에

————— 박진서(전 서울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아끼고 사랑하던 믿음의 형제 김 요한네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엔 당신과 영원한 이별을 위해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과 친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김 요한네스를 당신의 따뜻한 품에 맞아 주시고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오늘은 늦가을의 단풍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제가 22살 아직 젊은 나이로 합동통신 사회부 견습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무섭기보다 꼭 큰 형님 같이 보살펴 주시던 분이 부장님 이셨습니다. 그로부터 60년, 일자리는 달랐지만 반평생을 훨씬 넘는 긴 세월 속에 과판만장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장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귀한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떠나신 부장님의 모습을, 그리고 발자취를 뒤돌아 봅니다. 부장님은 1923년생으로 고려대학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경영학과를 나와 해방된 이듬해 46년 독립신문 정경부기자로 출발, 52년 합동통신에 입사, 정치부장, 사회부장을 겸임하면서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던 50년대 후반 자유당 정부의 외무부등 이른바 중앙청을 출입, 발군의 취재력으로 너무나 초라했던 초창기 한국외교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했고 한국외교사의 산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편집부국장, 출판국장을 끝으로 20년 넘게 젊은 청춘을 불태우던 합동을 떠나 65년 일본 時事통신 서울지국장으로 옮겼고 93년까지 내외뉴스 한국지사장을 역임, 40년을 넘기는 언론인 생활을 마쳤습니다.

애주가였지만 아무리 술을 마셔도 말과 몸가짐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또 다방면으로 아는 것이 많아 어느 모임에서도 화제를 이끌었고 당신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항상 얼굴에 너그러움이 가득했던 김 부장은 철저하고 빈틈없는 원칙주의자였지만 부하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눈감아주는 형님 같은 데스크로 기억에 남습니다.

김 부장님! 당신이 못다 한 일이 있다면 이제 여기 남은 우리가 그 뒤를 잇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언론인의 삶을 몸소 실천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고달팠던 한평생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했던 기억만을 간직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김흥기 회우 별세

김흥기 회우가 10월 2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서울 화곡본당성당에서 10월 24일 오전 10시 발인 했다.

고인은 1939년 8월 29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1965년 중앙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언론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신아일보 공채 1기 사진부 기사를 시작으로 서울 코리아 라이프 사진부 기자, 서울신문 사진부 기사를 거쳐 이 신문 주간국 사진부차장, 제2사진부장, 출판편집국 사진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언론인회에서는 김은구 회장, 정운중 상임이사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은구 본회 회장이 조문을 하고 있다.

김흥기 회우 영전에

————— 조덕연(전 서울신문 부국장겸 사진부장)

고인은 생전에 많은 일화를 남겼다. 어릴 때부터 괴짜였다는 김흥기, 술자리에서 돌아가는 삼각지-배호 노래가 흘러나오면 숙연히 생각에 잠긴다, 자기가 바로 돌아가는 삼각지의 주인공 인 듯하다며 추억에 잠기곤 했다. 1969년 12월 2일 한밤 근무를 마치고 열큰한 기분으로 선배와 함께 지프를 타고 귀가 중 삼각지 고가 교각 초석을 들이받아 선배를 먼저 보내고도 살아남았다. 그 사건을 겪었으면 술이 지겨울 만도 한데 그 한이 서려서 인가, 술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 지지 않았나 싶다. 고인은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 연예자인 선데이서울에서 카메라 렌즈로 연예인들을 쥐락펴락 내로라하는 기자였다. 그래도 그때 맺은 인연의 끈이 늦게까지 이어져 왔음을 보아 친화적인 인간성을 짐작케 한다,

어디에 있어도 그는 좌중의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대상이었다. 몇 해 전 대한언론인회에서 동해안으로 문화 탐방을 갔을 때다. 숙초에서 저녁에 몇몇이 술판을 벌여 얼마나 마셨던지 아침출발 시간에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일행들은 혹여 변이나 당하지 않았나해서 해변가까지 찾아보는 해프닝을 벌이는 등 수소문 끝에 이게 웬일인지 서울 화곡동 자기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이 황당한 사건은 오래도록 화자 되고 있다. 그는 또한 몸보신에는 남달라 뱀탕을 어찌나 즐겨 먹었던지 거나해지면 눈빛이 달라 뱀기가 들었다 해서 비암이라 불러 주었더니 자작 비암(飛岩)이라고 호를 새겼다.

한때는 술을 끊으려고 알코올클리닉까지 갔으나 오히려 술친구를 더 만들어 가지고 나왔으니 가히 기인이 아닌가싶다. 취중에도 부인 다루는 법은 엄치 시대에 가히 독보적이다. 그 험구에도 부인 김점옥 여사는 못들은 척 웃음으로 대하며 보살펴 ‘천사표 마누라’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내외는 마지막 가는 날 고인은 부인을 껴안고 “미안하오. 수고했소. 고맙소.” 세 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았다 하니 화제의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었나 싶다. 백세 시대라는데 76세는 좀 이르지 않는가. 좋은 일화도 많은데 술협담만 늘어놓아 미안하히. 친구여 안녕히 잘 가시게나.

김한구 회우 별세

김한구 회우가 지난 10월 6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삼성 서울병원에서 8일 오전 6시 발인 했다. 고인은 1939년 7월 1일 경북 구미에서 출생하여 경북대 사대부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64년 동양통신 견습 공채 1기로 입사해 사회부장, 기획담당 부국장으로 활약했다. 1979년 언론계를 떠나서는 2년 동안 경인창업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았으며 1994년 동양철관 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겨 이 회사 상무이사, 부사장을 거쳐 사장으로 승진해 탁월한 경영능력을 과시했다. 고인은 1993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은탑산업훈장을 받은바 있다. 대한언론인회는 7일 오후 5시 김은구 회장, 정기정 감사, 이병대 전 부회장, 정운중 이사 서병호 회우(추도사 낭독)가 빈소를 찾아 추도식을 갖고 명복을 빌었다.



서병호 회우가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

김한구 친구여

————— 서병호(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김한구! 그대는 왜 말이 없는가

그대는 정녕 우리 곁을 떠나셨는가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외치던 처자식의 간구(懇求)가 들리지 않는가.

문안전화를 했더니 “곧 퇴원 할 것이다.” 메르스 이후 문병은 서로 예의가 아니라면서 병원에 오지 말라는 것이다. 부인에게서 울먹이는 전화를 받았다. 바로 달려갔으나 중환자실은 외부인 출입금지였다.

김한구 친구는 한마디로 성실한 삶을 살다가 떠난 친구다. 성실의 덩어리다.

그의 일생은 언론인과 경영인생활로 대별된다. 동양통신 견습1기로 언론계에 투신한 이후 사회부장을 거쳐 부국장까지 역임하였다. 그 후 동양철관 사장, 충북 케이블 TV사장등 기업인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부지런함과 성실한 생활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본다. 이러한 성공한 일생을 산 배경에는 남모르는 노력이 있었다.

주경야독으로 노인 복지학 박사학위를 중앙대학교에서 따내어 강의를 하기도 했다. 깨끗한 자세, 자신만만한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어릴 때는 씨름으로, 어른이 되어서는 테니스로 다져진 몸에서 건전한 정신이 샘솟을 수 있겠다. 고인은 1남 2녀를 둔 아버지다. 사위, 며느리를 포함하여 6명의 자식이 모두 박사 학위를 취득해 국내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본인을 포함하면 7명이 박사이니 이것이 어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공한 삶의 한 장면이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과는 달리 후회 없는 한 평생을 산 한 사나이의 묘비가 세워질 것이다. 본인이 직접 쓴 “흔적 없는 발자취 후회는 없다”가 그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다.

충주 별장 진달래 동산을 두고 어찌 떠났는지. 거실 벽면 가득한 CD를 누가 들을 것인가.

그대 동산의 붉고, 흰, 진분홍 진달래꽃을 가시는 길에 뿌리고 싶다. 당신은 분명 이 세상에서 하늘이 부여한 숙제를 다 했다는 것이지요. 根苗花實의 소임을 다 한 것입니다. 흥진만장한 이 세상 일 다 잊으시고 부디 하느님 곁에서 영생복락하소서!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의 절절한 바람입니다.



경북일자리알림e www.gbjob.kr



경상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경북일자리알림 e 웹
www.gbjob.kr
회원가입 및 구인·구직등록으로 구인공고, 취업정보, 입사지원, 실시간 자동매칭, 알선 등을 편리하게

전화상담
1544-8819

방문상담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층

팩스 054)716-0017
구인·구직신청서를 팩스로 전송

경북일자리알림 e 앱
앱에서 기업인 구직자는 앱을 통해서도 취업정보, 입사지원, 실시간 자동매칭, 알선 등을 내 손 안에서 편리하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 드립니다!

경북일자리종합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경북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도내 다양한 채용정보와 인재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구직신청과 직업알선은 물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총괄 기관입니다.

구직활동을 전문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효과적인 구직활동 방법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방법과 동행면접까지 일자리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드립니다.

경북일자리종합센터는 다양한 직종의 우수한 인재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센터로 전화하시면 구인신청과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기업회원으로 일자리센터의 지속적인 채용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우동정 개나다순

서울신문사우회 발전기금운영위 총무



김두호(전 스포츠서울 편집부국장)회우= 최근 발족한 서울신문사우회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총무로 위촉돼 봉사 중.

미디어서울그룹 회장 선임



김명수(경향신문 사우회 회장·전 신아일보 회장)회우= 지난 10월 5일 미디어서울그룹(일간투데이, 서울뉴스통신, 경인종합일보) 주주총회에서 그룹 2대 회장으로 선임. 김 회우는 경향신문 편집국장대우, 경인일보 사장, 한국부동산TV 회장, 코리아인터넷뉴스라인 대표,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위원장 등을 지냈다.

고바우 만화상 선정



김성환(고바우)원로회우= 지난 10월 12일 고바우 만화상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고바우 만화상 수상자로 1980년대 인기 명량만화 ‘맹꽁이 사당’을 그린 윤승운(72)화백을 선정했다. 고바우 만화상은 김성환 화백의 업적을 기려 제정된 상이다. 시상식은 11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애니메이션센터에서 갖는다.

현대사체험수기 우수상 받아



김 집(전 TBC 논평위원)원로회우= 10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행동본부와 조갑제 닷컴이 주관한 광복 70주년 기념 현대사체험수기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수기 제목은 ‘5대독자아들과 함께 입대한 43세 아버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였다.

‘문화산책 청류회’ 20주년행사



김 현(여행가·문화산책 청류회 회장)회우= 청류회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영화관람, 여행(중국 청도), 오페라 감상 등 행사를 갖는다. 청류회란 성천아카데미 창립자인 성천 유달영 전 서울대 교수가 지어준 이름이다.

방일영문화재단 저술지원 받아



백인호(전 YTN 대표이사)회우=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으로부터 2015년 하반기 저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워싱턴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세미나



봉두완(한미그룹회장)회우= 10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손일근(가천대 석좌교수·전 한국일보 고문)회우= 지난 10월 14일 서울대학교 개교 69주년 기념식에서 제25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 됐다. 손일근 회우는 언론인, 시민단체, 동창회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통해 서울대는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사우회 수석부회장



안병준(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회우= 최근 서울신문사우회 수석 부회장 겸 회보 편집인으로 위촉됐다.

한국영상자료원장 퇴임



이병훈(한국영상자료원장)본회 이사= 지난 10월 7일 자로 한국영상자료원장 6년 임기를 보람있게 마치고 퇴임했다. 이원장은 재임 중 94편의 미보유자료를 발굴했는가 하면 ‘영상자료원 40년사’를 정리 출간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드라마페스티벌 학술행사 사회



정창기(한국방송협회 부회장)편집위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주에서 열린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학술행사 세션 1 ‘멀티플랫폼 시대의 콘텐츠변화’에서 사회자를 맡았다.

존경받는 JC 선배 대상 받아



제재형(한국일보 사우회 회장)본회 고문= 10월 24일 열린 (사)한국청소년회의소(JC)특우회 39차 우정의 날 전국대회에서 존경받는 선배 대상을 받았다. 제 고문은 또한 10월 3일 제2회 세계한인순국선열 애국지사 호국영령 합동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했다.

대중문화예술상 심사위원



조원석(전 KBS라디오 본부장)회우= 201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 대중문화예술상은 방송, 영화, 공연,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과 공적을 심사해 훈장 표창 등을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북한산 둘레길 탐방합니다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오는 12월 2일 송년산행을 겸해 북한산 자락을 쉽고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해 인기를 끌고 있는 북한산 둘레길 탐방산행에 나섭니다. 1, 2구간 탐방에 이어 찾아가는 ‘흰구름길’(3구간)과 ‘솔샘길’(4구간)은 북한산 둘레길 중 가장 아름다운 숲길을 자랑하고 있으며 구름전망대와 전망 데크가 요소요소에 조성되어 있어 북한산의 멋진 전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북한산 둘레길 탐방산행에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산 행 지 : 북한산 둘레길(3, 4구간)
- 집합일시 : 2015년 12월 2일(수요일) 오전 10시
- 집합장소 : 수유역(지하철 4호선) 1번 출구(지상)
- 준 비 물 : 추계등산장비 식수 간식
- 회 비 : 20,000원
- 문 의 : 이상호 회장(010-3855-8624) 정창기 부회장 (010-8867-9457) 이우진 부회장(017-210-3673) 장 옥 부회장(010-7486-2472) 나용경 총무 (010-2691-0084)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본회 기우회 연말 바둑 대회 개최

대한언론인회 기우회 (회장 정기정)는 오는 11월 30일 (월) 오후 2시 종로 3가 바둑 세계기원에서 을미년을 결산하는 연말 바둑 대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 많이 참석 하셔서 그동안 갖고 닦은 바둑 실력을 맘껏 펼쳐 주시고 또 한 해를 보내는 송년의 아쉬

움을 바둑으로 달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회는 A조(1~3급)와 B조(4급 이하)로 나뉘 진행되며 시상은 각조 3위 까지 주어지며 대국 룰은 한국 기원 규정에 따릅니다. 회비는 없으며 대회 후 송년 회식이 있습니다.

연락처 : 010-3772-6766(총무).

기원 : 070-4122-2333.

‘송년 KJC건강포럼’ 28일 개최

제목 : ‘노년기 면역력 높이는 삶’
연사 : 임춘희 박사(한국가족상담연구소장)
일시 : 2015/11/28(토) 오후2:00
장소 : 명동 ‘이윤수 비뇨기과’ 홀
(을지로입구역 외환은행 앞)
연락 : 이보길 회원사업위원장(010-4461-5657)

◀ 주 소 변 경 ▶

김영환 회우= 인천 강화군 화도면 가능포로 (우 23060)
배학철 회우=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201동 105호(올림픽 웨일리타운 아파트) (우 05834)
박미정 회우= 서울 관악구 관악로 30길 12, 봉천우성아파트 105동 308호(우 08735)
조원석 회우=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19길 144, 103동 1309호 (신도림동 삼성쉐르빌) (우 08200)

회우경조사

결 혼

이병삼 회우= 10월 10일(토)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더채플앳청담 3층 커티지 홀에서 장남 결혼
최연석 회우= 10월 24일(토)오전 11시 여의도 루나미엘레(CCMM빌딩) 12층에서 아들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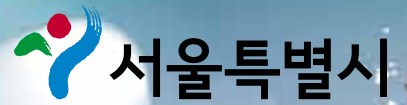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팔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5년 9월 30일 부터 10월 27일까지)

김용발(16) 장석훈(15)
김준길 (입회비) 장 옥(15.16)
김한구(15) 장효상(15)
유무정(15) 미상(90,000원)
이정식(13,14,15)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I.SEOUL.U

나와 너의 서울

시민이 만든 서울브랜드,
시민과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134,747건의 사전투표,
10월 28일 현장 시민투표와 전문가 투표를 거쳐
I.SEOUL.U가 새로운 서울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나와 너의 서울
서울을 대표하고, 시민과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키워가겠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 서울이 있습니다”

처음엔 좀 낯설어도 반갑게 맞아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seoulbrand.go.kr **서울브랜드** 🔍



건강한 우리사회 함께 만듭시다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

작지만 큰 약속을 하나씩 지켜나갈 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생활 속 예방수칙을
치근치근 실천한다면
더욱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실천 캠페인



손 씻기는 건강을 지키는 첫 단추
비누로 손 씻기,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기침할 때는 소매로 가리기
기침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손수건·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주세요



응급실은 위급한 환자에게 양보
위급한 환자가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 주세요



병문안 가급적 자제하기
병실에는 꼭 필요한 보호지만,
병문안은 전화로, 문자로, SNS로 안부인사를 전하세요



국·찌개 덜어먹고 술잔 돌리지 않기
함께 식사할 때 국·찌개 덜어먹기,
술잔 돌리지 않기로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4대 개혁 "100년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개혁,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노동개혁 17년만에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사정대타협, 우리 아들과 딸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